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12 주년 기념 토론회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일시 | 2021년 10월 19일 (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한국복지공공연구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축 사】 이 효 수 前 영남대학교 총장.....	5
-----------------------------	---

【주 제】 중장기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주 제 발 표】

김 우 철 교 수	7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토 론 문】

이 태 석 연구위원.....	29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주 원 실장.....	43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 영 숙 센터장.....	5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정 창 룰 교 수	63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 협력기관 및 단체) 소개.....	69
--	----

프로그램

1 부

사회 : 김 기 영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본 연구회 이사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4) 축 사 이 효 수 영남대학교 석좌교수/ 前영남대학교 총장
- 5) 단체기념사진 모든 참석자

2 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 복지전공

○ 주제발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토 론

.....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 정 창 릉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 김 우 철 교수

축 사

이 효 수

영남대학교 석좌교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요한 국가적 과제 가운데 하나인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2021년 8월 현재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가 927.2조원으로 1000조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36% 전후에서 안정성을 보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11.3% 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2021년에는 47.3%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과 4년 후인 2025년에는 국가채무가 1408.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무려 60%에 육박하는 58.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최근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 목표치 60%를 크게 벗어나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최근 국가채무의 급증이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재정지출 요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살피야 할 국회마저 포퓰리즘 재정지출을 오히려 강요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재정수입원인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지출 수요는 급증하는 시점에 이미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의한 자산 양극화, 디지털 양극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소득 양극화 등이 중첩되면서, 양극화가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이른바 K자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극화 완화와 빈곤층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고통은 결국 국민이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저항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양호하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는 달러, 엔화, 유로화와 같은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가 아니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면, 국가신용평가가 크게 떨어지고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이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국가는 재정위기에 빠지고,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법인세 및 재산세가 높고 소득세가 낮고 2019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의 비중이 37%에 달하는데, 이런 조세구조는 조세 및 재정정책의 포퓰리즘적 접근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은 0.84명을 밀도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가까운 장래에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쇠락하고 급기야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체출산율에 접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적 출산 및 양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막대한 추가적 재정수요를 불러올 것입니다.

재정 악화가 이와 같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선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적 재정지출과 국가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강력한 재정준칙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에 2025년 도입을 목표로,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한다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형 재정준칙의 적정성, 면세자 축소 등 조세 구조의 재조정에 의한 조세 형평성 확보와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 재정지출의 낭비적 구조 개선과 효율적 집행 방안, 예산 구조의 재조정에 의한 예산 효과 극대화 방안, 예산절약과 세수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우철 교수님의 훌륭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신 재정, 복지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져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이런 소중한 세미나를 마련하신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10. 19.

[주 제 발 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김 우 철 교 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예일대학교 Economics ph.D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장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2021. 10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구성

- I. 재정여건
- II. 재정건전성
- III. 코로나19 재정기조 국제비교
- IV. 재정위험 관리와 재정건전화 정책
- (참고)V. 세입확충

I. 재정여건

2022년 예산안 재정총량

2022년 예산안: 4년 연속 확장적 재정 기조

- 총지출은 604.4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전체 규모가 8.3%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
- 총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여건 개선으로 548.8조원으로 2021년 2차 추경 대비 6.7% 증가
- 국세수입 호조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4.4% 적자(통합재정수지적자 2.6%), 국가채무비율은 50.2% 예상

(단위: 조원, %)

	'21		'22안
	본예산	2회 추경	
◇ 총 수 입	482.6	514.6	548.8
(증가율)	(0.2)	(6.8)	(6.7*)
◇ 총 지 출	558.0	604.9	604.4
(증가율)	(8.9)	(18.1)	(8.3)
• 통합재정수지	△ 75.4	△ 90.3	△ 55.6
(GDP대비, %)	(△ 3.7)	(△ 4.4)	(△ 2.6)
•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GDP대비, %)	(47.3)	(47.3)	(50.2)

* '22년 총수입 증가율은 '21년 2회 추경 대비

(단위: 조원, %)

구 분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예산(추경)	'22년 예산
총 국 세	293.5	285.5	314.2	338.6
일반회계	286.0	276.3	304.6	328.6
특별회계	7.4	9.3	9.6	10.1

출처: 기획재정부(2021) 2022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안 재정기조

연속 4년간 계속된 확장재정으로 재정여력 급속 소진

- 내년 총지출 증가율 8.3%은 경상성장률 4.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2019년 이후 연속하여 4년째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반복
- 내년에도 코로나19 경기침체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경상성장률(4.2%)보다 훨씬 크게 늘어날 것(7.8% 증가)으로 예측
- 2021년 6.2%에 달했던 관리재정수지적자가 내년에 4% 중반으로 하락한 것은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노력보다는 올해 초과세수와 내년의 세수 호조에 기인
- 낙관적인 전망에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선을 넘어선 지 단 2년 만에 다시 50%선으로 진입, 재정여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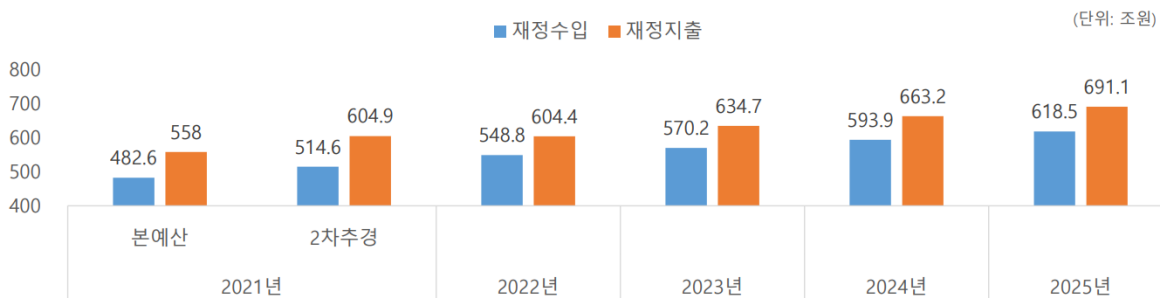
2021~25년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입: 경제회복과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향후 4년간 지속 증가 예상

(‘21년 482.6조원 → ‘25년 618.5조원, 연평균 4.7% 증가)

- (국세수입) 세계경제 회복으로 견조한 증가 예상(‘21년 282.7조원 → ‘25년 383.1조원, 연평균 5.1% 증가)
- (기금수입) 가입자 확대, 자산운용 수입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21년 28.9조원 → ‘25년 30.0조원, 연평균 0.6% 증가)
- (세외수입) 벌금수입 감소, 부담금 수입 증가 등 통상수준 유지(‘21년 171.0조원 → ‘25년 205.4조원, 연평균 4.7% 증가)

2021-2025년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25년 중기재정전망

재정지출: '22년 확장적 재정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23년 이후부터 증가율 하향 조정,
'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4%초반) 증가(연평균 5.5% 증가)

- (의무지출) 복지분야 등 중심으로 지출 소요 확대('21년 266.1조원 → '25년 342.7조원, 연평균 6.5% 증가)
- (재량지출) 코로나극복과정의 지출은 단계적 정상화 등('21년 291.9조원 → '25년 348.4조원, 연평균 4.5% 증가)

2021-2025년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차추경					
재정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4.7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52.9	367.7	383.1	5.1
○세외수입	28.9	29.3	26.7	27.4	28.4	30.0	0.6
○기금수입	171.0	171.0	183.5	189.9	197.7	205.4	4.7
재정지출	558.0	604.9	604.4	634.7	663.2	691.1	5.5
(증가율)	(8.9)	(18.1)	(8.3)	(5.0)	(4.5)	(4.2)	
○의무지출	266.1	279.1	301.1	311.7	327.0	342.7	6.5
(증가율)	(4.1)	(9.2)	(13.2)	(3.5)	(4.9)	(4.8)	
(비중)	(47.7)	(46.1)	(49.8)	(49.1)	(49.3)	(49.6)	
○재량지출	291.9	325.8	303.3	323.0	336.2	348.4	4.5
(증가율)	(13.8)	(27.0)	(3.9)	(6.5)	(4.1)	(3.6)	
(비중)	(52.3)	(53.9)	(50.2)	(50.9)	(50.7)	(50.4)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25년 중기재정전망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지난해 예상했던 수준보다 모두 감소

- (관리재정수지) '21년 6.2% 적자 → '22~'25년 4%대로 적자폭 축소
- (국가채무) 지속 증가하여 '21년 47.3% → '25년 58.8% 전망

2021-2025년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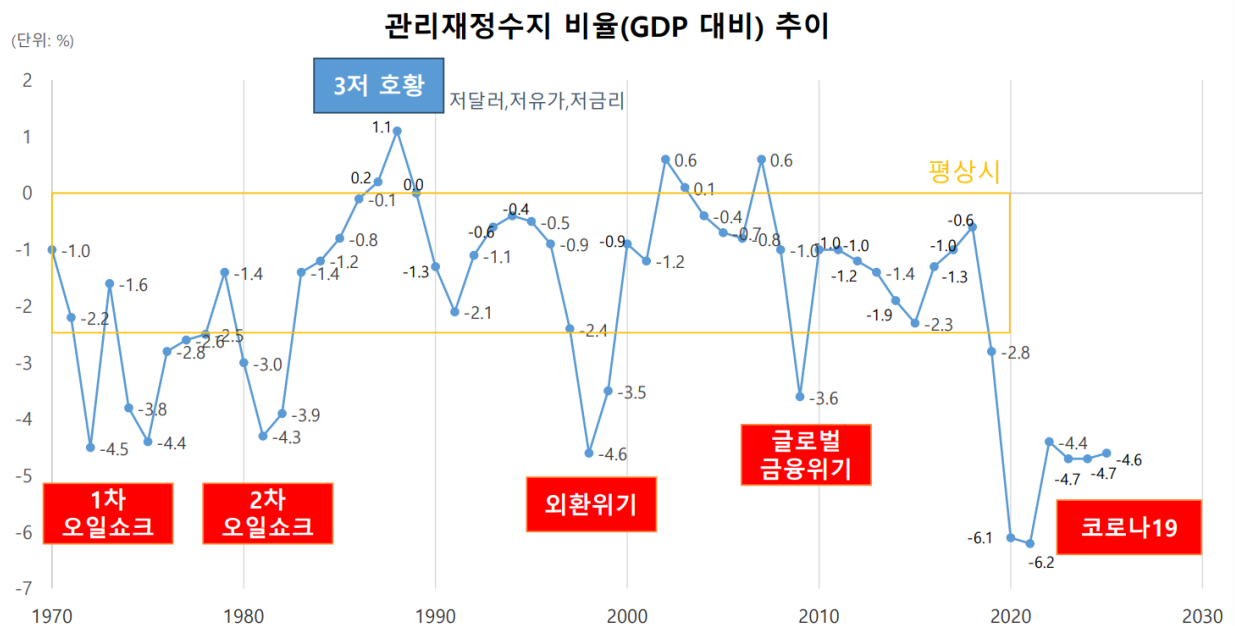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2차추경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64.5	-69.4	-72.6
(GDP 대비, %)	-3.7	-4.4	-2.6	-2.9	-3.0	-3.0
○관리재정수지	-112.5	-126.6	-94.7	-111.0	-108.4	-109.2
(GDP 대비, %)	-5.6	-6.2	-4.4	-4.7	-4.7	-4.6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1175.4	1291.5	1408.5
(GDP 대비, %)	47.3	47.3	50.2	53.1	56.1	58.8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II. 재정건전성

관리재정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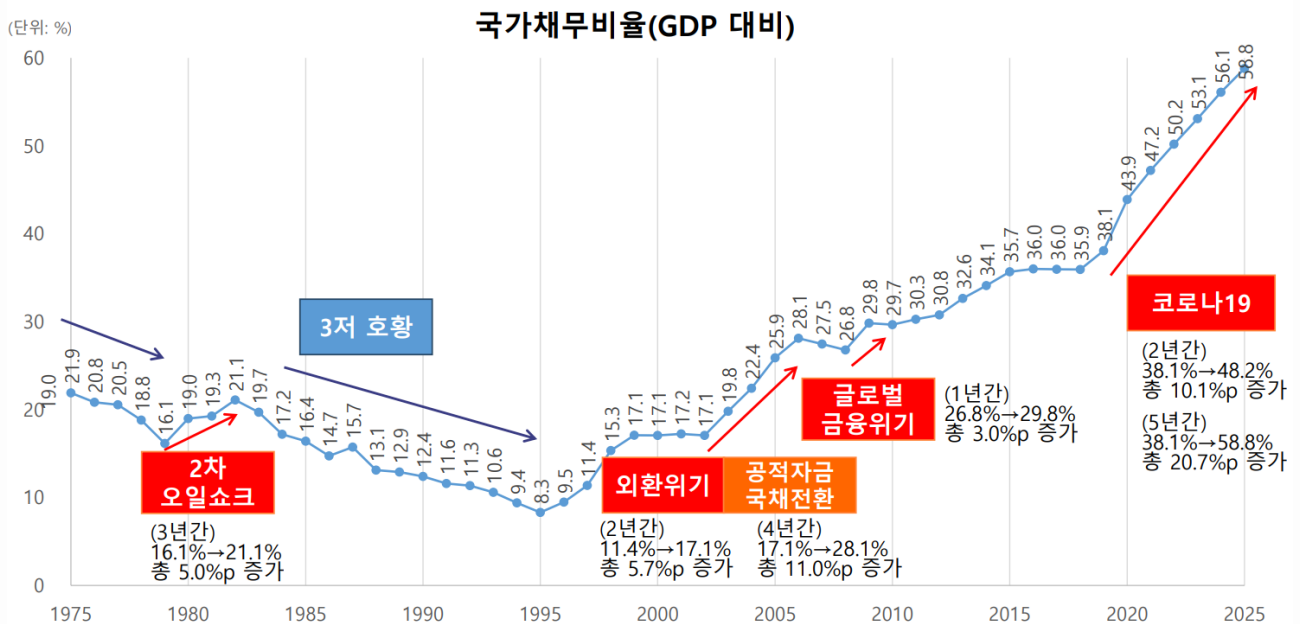
만성적인 재정적자

재정적자의 급속한 확대와 고착화

- 2019년부터 빠르게 늘어난 재정지출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확대재정 결과, '20년과 '21년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이 GDP 대비 6%초반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수지적자('20년 6.1%, '21년 6.2% 재정수지적자)는 이 기간의 재정정책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확장적이었음을 의미
- 내년도 세수 호조에 대한 기대로, 6%의 적자 폭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5년까지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이 4% 중반에 머물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

→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발생한 재정적자가 위기 종료 후 큰 폭으로 개선된(외환위기 -4.6% → -3.5% → -0.9%, 금융위기 -3.6% → -1.0% → -1.0%) 것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재정수지적자가 4년 이상 지속되어 고착화되는 특징 보임

국가채무비율 추이



국가채무 급증 현상

전례 없는 국가채무 급증 현상: 2019-2025년 6년간 채무비율 20.7%p 증가 예상(38.1% → 58.8%), 이는 외환위기 기간(1997-1999년)과 공적자금 국채 전환기(2002-2006년)의 6년간 채무비율 증가폭 16.7%p를 크게 상회

- 2018년 이후 계속된 재정수지적자의 누적으로 2018년 35.9%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1%, 2022년 50.2%로 급속히 늘어난 이후, 2025년에는 58.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코로나19 2년 동안에 국가채무비율이 10.1%p 오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기간의 증가폭을 크게 상회
 - ✓ 코로나19 2년간: 채무비율 38.1% → 48.2% 총 10.1%p 증가
- 2019-2025년 기간 연평균 국가채무 비율 상승폭은 5.4%p는 외환위기 기간의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2002-2006년 기간 연평균 채무증가 속도(2.5%p)의 2배를 넘어선 수준
 - ✓ 코로나19 이후 6년간: 채무비율 38.1% → 58.8% 총 20.7%p 증가 예상

재정여건 악화 원인과 과제

19년 이후 급증한 재정지출이 대규모 재정적자의 근본원인

-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경제정상화로 세수가 종전의 증가율을 회복한다 해도 재정수지적자가 뚜렷이 개선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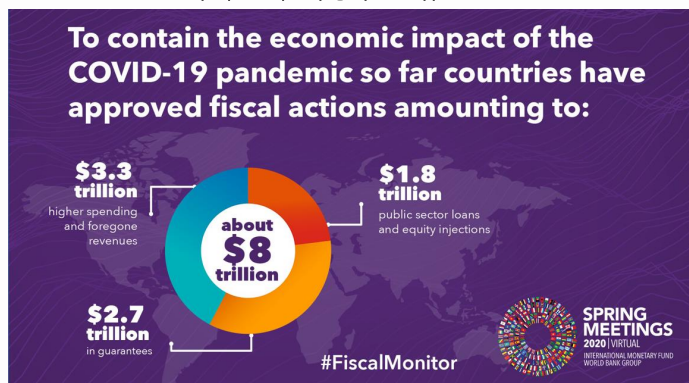
→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이 관건

III. 코로나19 이후 재정기조 국제비교

코로나 위기대응 재정 운용: 글로벌 동향

- 코로나 위기의 직접적 피해 대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반 유지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적극 활용
- 실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 사례 조사 결과:
 - 1) 사업체에 대한 현금지원 2) 일자리 유지 지원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 투입

<위기초기 재정투입 규모>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 추이
(IMF 2020 Fiscal Monitor)

- '20. 4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8조 달러 재정**이 투입될 것 집계
- 5월 기준: 9조 달러 재정 투입 집계, 한달 새 1조 달러 증가
- 6월 기준: 약 11조 달러 (\$5.4조: 직접지원, \$5.4조: 간접지원)
- **9월 기준: 약 11.7조 달러**, 세계 GDP의 11.9%
\$5.8조: 직접(재정)지원 지출증대, 감세
\$5.9조: 간접(금융)지원 대출, 자본인수, 보증

국가별 재정대응

각국의 재정대응은 차입능력과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소득이 높은 선진경제국의 재정수지적자 비율(GDP 대비 -13.3%)이 신흥경제국(-10.3%)이나 저소득개발국(-5.7%)보다 더 커, 재원조달 여건이 양호한 나라들이 비상 상황에 직면하여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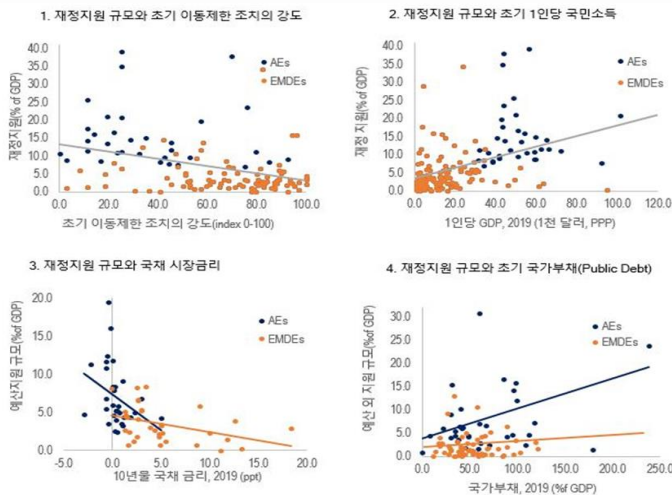
	Overall fiscal balance						Gross debt					
					Difference from						Difference from	
	Current Projections				October 2020 WEO Projections		Current Projections				October 2020 WEO Projections	
	2018	2019	2020	2021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2020	2021
World	-3.1	-3.8	-11.8	-8.5	0.8	-0.9	82.3	83.5	97.6	99.5	-1.1	-0.3
Group of Twenty (G20)	-3.7	-4.5	-13.0	-9.4	0.9	-1.0	89.7	91.3	106.8	109.0	-1.0	-0.2
Advanced Economies	-2.7	-3.3	-13.3	-8.8	1.1	-1.9	103.6	104.8	122.7	124.9	-2.8	-0.7
Advanced G20	-3.3	-4.0	-14.3	-9.6	1.1	-2.1	111.2	112.7	132.1	134.7	-2.9	-0.8
United States ^{1,3}	-5.8	-6.4	-17.5	-11.8	1.2	-3.1	106.6	108.2	128.7	132.5	-2.5	-1.1
Euro Area	-0.5	-0.6	-8.4	-5.9	1.8	-0.9	85.8	84.0	98.1	99.0	-3.0	-1.0
Germany	1.8	1.5	-5.1	-3.4	3.0	-0.2	61.8	59.6	70.0	69.9	-3.3	-2.3
France	-2.3	-3.0	-10.6	-7.7	0.2	-1.2	98.1	98.1	115.3	117.6	-3.4	-1.0
Italy	-2.2	-1.6	-10.9	-7.5	2.1	-1.3	134.4	134.6	157.5	159.7	-4.3	1.4
Spain ²	-2.5	-2.9	-11.7	-8.2	2.4	-0.7	97.4	95.5	118.2	118.9	-4.9	-2.4
Japan	-2.6	-3.4	-13.8	-8.6	0.3	-2.2	232.6	234.6	258.7	258.7	-7.5	-5.3
United Kingdom	-2.3	-2.3	-14.5	-10.6	1.9	-1.4	85.8	85.2	103.3	110.8	-4.8	-0.8
Canada ³	0.3	0.5	-20.0	-7.8	-0.1	0.9	88.8	86.8	115.7	116.4	1.1	1.5
Australia	-1.2	-3.8	-10.4	-11.4	-0.3	-1.0	41.7	47.4	63.8	74.8	3.4	4.6
Korea	2.6	0.4	-3.1	-2.7	0.1	-0.4	40.0	41.9	48.1	53.0	-0.3	0.7
Emerging Market and Middle Income Economies	-3.8	-4.8	-10.3	-8.6	0.4	0.6	52.3	54.3	63.3	65.3	1.1	0.3
Excluding MENAP Oil Producers	-4.0	-5.0	-10.3	-8.7	0.5	0.6	54.1	55.9	65.0	67.1	1.3	0.4
Emerging G20	-4.3	-5.4	-10.9	-9.1	0.4	0.8	53.1	55.4	64.3	66.6	1.5	0.5
Asia	-4.5	-6.0	-11.1	-10.3	0.3	0.7	54.2	56.7	65.8	69.4	2.1	1.5
China	-4.7	-6.3	-11.8	-11.0	0.1	0.8	53.7	56.5	65.2	69.4	3.5	2.9
India	-6.3	-7.4	-11.5	-9.7	1.5	1.2	69.5	73.0	85.5	83.1	-3.9	-6.8
Indonesia	-1.8	-2.2	-6.2	-6.1	0.1	-0.6	30.4	30.6	38.7	43.1	0.2	1.3
Europe	0.4	-0.9	-6.6	-4.4	0.6	0.1	29.4	28.7	38.4	38.5	0.6	-0.4
Russia	2.9	1.9	-4.6	-2.3	0.6	0.3	13.6	13.8	21.0	20.7	2.1	1.7
Turkey	-3.7	-6.4	-7.4	-7.1	0.5	0.8	30.2	31.7	40.4	40.3	-1.2	-5.2
Latin America	-5.2	-4.1	-9.8	-4.9	1.3	0.3	69.2	70.0	78.7	75.4	-2.9	-5.5
Brazil ⁴	-7.0	-5.9	-14.5	-5.9	2.2	0.6	85.6	87.7	95.6	92.1	-5.8	-10.7
Mexico	-2.2	-2.3	-5.2	-3.4	0.6	0.0	53.6	53.3	63.0	63.0	-2.5	-2.6
MENAP	-2.9	-3.7	-9.5	-6.8	0.2	0.1	39.9	45.1	53.1	53.5	-0.2	-0.3
Saudi Arabia	-5.9	-4.5	-11.7	-4.2	-1.1	1.8	19.0	22.8	32.5	32.9	-1.0	-1.5
South Africa	-4.1	-6.3	-14.2	-12.2	-0.1	-1.0	56.7	62.2	77.7	84.9	-1.2	2.2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3.4	-4.0	-5.7	-5.0	0.5	0.1	42.8	43.3	48.5	48.5	-0.3	-1.1
Nigeria	-4.3	-4.8	-5.9	-4.7	0.8	0.2	27.7	29.1	34.4	34.3	-0.6	-1.2
Bangladesh	-4.6	-5.4	-4.7	-6.0	2.1	0.1	34.6	35.7	37.2	39.3	-2.4	-2.6
Oil Producers	0.2	-0.3	-10.6	-5.5	0.1	0.2	44.1	45.4	59.0	59.0	1.4	1.0
Memorandum												
World Output (percent)	3.5	2.8	-3.5	5.5	0.9	0.3						

주: IMF(2021) Fiscal Monitor Update

코로나 위기 대응 재정투입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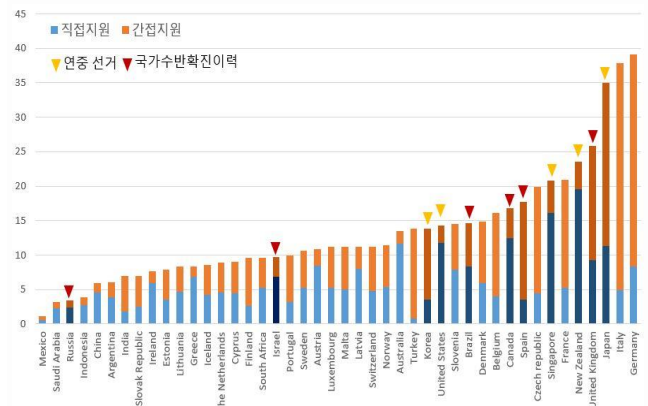
재정투입 결정요인: 1)경제력(1인당 GDP) 2)재정여력(부채비율)과 조달비용(이자율) 3)초기봉쇄강도 4)정치적 요인

〈재정지원 규모와의 상관요인 분석〉 *IMF(2020.10)



출처: IMF, Fiscal Monitor 2020.10. AE=Advanced Economies, EMDEs=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초기 이동제한 조치 강도'는 옥스퍼드대학의 정부지원지수 하위지표를 사용

〈주요국 재정대응 규모와 정치적 요인〉 *IMF(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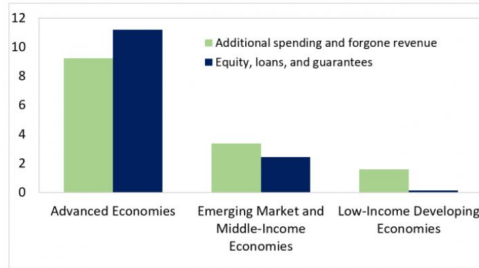


확장재정 가능의 전제조건 = 건전재정

-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의 본질:
증장기적 차원의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제약 하에서,
재정여력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Limited room for maneuver

High debt burdens have hampered the fiscal policy response, especially in emerging market and low-income economies. (announced measures as of September 11, 2020, in percent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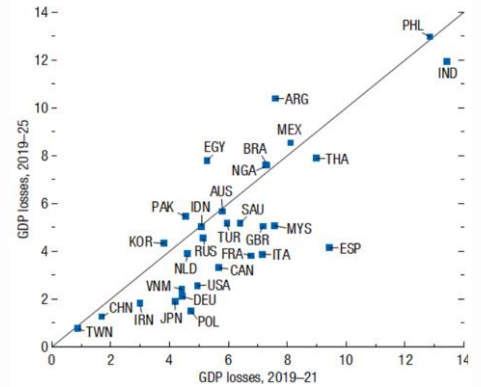


Sources: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IMF staff estimates. Note: The timeframe for the announced measures is country-specific, but the bulk of the measures announced so far are short-term crisis-response measures to be implemented in 2020-21. Country group averages are weighted by GDP in US dollars adjusted by purchasing power parity.

GDP Losses: 2019-21 versus 2019-25

(Percent difference between January 2020 WEO Update and October 2020 WEO projections)

Over the medium term, advanced and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will only modestly progress toward the 2020-25 path of economic activity projected before the COVID-19 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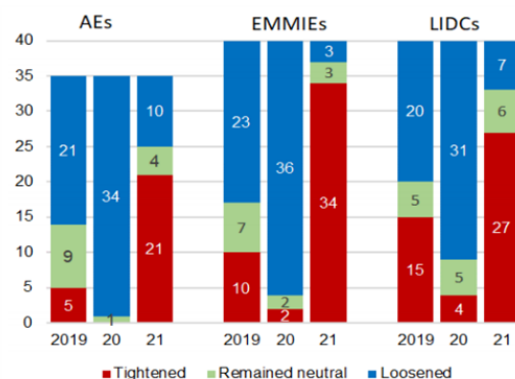
Source: IMF staff estimates. Note: WEO = World Economic Outlook. Data labels 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2021년 재정기조 국제비교

2021년 국가별 재정기조

-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20년의 확대재정 이후 2021년에는 대체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다만, 2021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진국의 비율이 신흥경제국 및 저소득개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다분히 재정여력에서의 우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확장재정을 유지하는 전 세계 10개 선진국 중 하나에 속함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재정기조: 국가의 수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주: AEs = advanced economies; EMMIEs = emerging market and middle-income economies; LIDCs =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2021년 재정수지 국제비교

2021년의 우리나라의 2020년 대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개선 정도는 다른 나라들보다 미약한 수준으로, 재정정상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태

- (세계경제) 경제성장을 개선에 따라 2021년 세계경제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3.3%p 개선(-11.8% → -8.5%), 즉,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짐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0.37%p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
- (한국경제) 우리나라는 2021년에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4.5%p 오르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단 0.4%p만 개선되어, 성장률 1%p 상승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0.09%p(세계평균의 1/4)에 불과하여, 경제회복에 따른 재정정상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함
- 관리재정수지 기준, 우리나라는 2021년의 경제성장을 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폭은 더욱 확대되어, 확장적인 재정기조가 오히려 더욱 강화

경제성장률 대비 재정수지 개선폭: 2020년 vs 2021

구분		2020년	2021년	2020-2021 변화폭
세계	경제성장률	-3.5%	5.5%	9.0%p
	통합재정수지	-11.8%	-8.5%	3.3%p
한국	경제성장률	-1.0%	3.5%	4.5%p
	통합재정수지	-3.1%	-2.7%	0.4%p
	관리재정수지	-6.1%	-6.2%	-0.1%p

주: Fiscal Monitor(2021.1)

국가채무 비율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채무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국가채무 국제비교에 이용되는 지표는 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D2) 지표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42.1%임(D1은 37.6%)
- D2 기준 2019년 OECD 채무비율 평균은 110.0%이나, 이는 가중평균으로, 단순평균은 80%대로 크게 낮아짐
- 우리나라의 D1과 D2 비율의 차이는 약 4.5%p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데, 황성현(2021)에 의하면,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 규모가 내부거래로 취급되어 일반정부 부채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 만일, GDP의 약 8% 수준으로 추산되는 '누락'된 국공채 규모를 포함하여 재계산한 '19년 D2 채무비율은 약 50%
- 이제,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2025년 D1 전망치 58.8%를 D2로 환산하고(+4.5%p) 국민연금 요인을 더하면(+8%p), 우리나라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4년 후 71.3%에 달하여, OECD 채무비율 단순평균(80%)에 근접함

*향후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가 줄어들게 되면, D2 규모는 이를 반영하여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국가채무 비율의 상대적 증가 국제비교

채무비율 증가율을 비교하는 상대적 방식의 평가 결과, 각국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의 채무비율에 비례(약 17%)하여 국채발행을 통한 자원조달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계경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2019년 대비 채무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17% 증가
- 독일도 팬데믹 대응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로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에 비해 17.5% 증가
- 선진경제국(17.1%)과 신흥국(16.6) 간 채무비율의 상대적 변화율 거의 차이가 없음, 각국은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차입에 의한 재정투입 규모를 종전 채무비율을 약 17% 가량 증가시키는 선에서 결정
- (한국) 2020년 우리나라 채무비율 증가율 역시 14.8%로 국제평균(17%)보다 다소 낮지만, 큰 차이 보이지 않음

팬데믹 전후 일반정부 국가채무(D2) 변화(2019-2020)

채무증가	한국	선진경제국	독일	신흥경제국	세계 평균
변화폭(%p)	6.2	17.9	10.4	9.0	14.1
변화율(%)	14.8	17.1	17.5	16.6	16.9
변화율 배율 (한국 대비)	-	1.15	1.18	1.12	1.14

주: Fiscal Monitor(2021.1)

2021년 경제회복기 채무관리 국제비교

- 경제적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2021년 경제회복 국면에서 각국은 2020년에 크게 급증한 채무의 추가적인 증가 속도를 전년 대비 2%p 내외 수준에서 통제함으로써 채무관리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임
 - ✓ 2021년 선진경제국의 전년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폭은 약 2.2%p(122.7% → 124.9%)
 - ✓ 신흥경제국들도 2021년 채무비율이 전년에 비해 2.0%p 증가
- 이러한 국제적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전년에 비해 4.9%p(48.1% → 53.0%) 증가함으로써, 세계경제 채무비율의 평균 증가폭 1.9%p(97.6% → 99.5%)의 2.5배를 상회
-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손실이 작았음에도 경기회복기에 채무증가 통제 노력에 나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위기 시와 유사한 속도로 채무를 늘리는 것은 재정여력의 급속한 소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임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 2014-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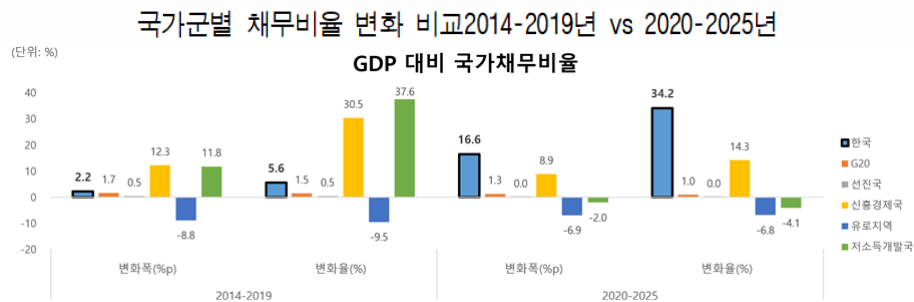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14-2019		2020-2025	
													변화폭	변화율	변화폭	변화율
한국	39.7	40.8	41.2	40.1	40.0	41.9	48.4	52.2	55.8	59.3	62.3	65.0	2.2	5.6	16.6	34.2
G20	111.5	110.8	113.9	111.7	111.6	113.2	135.0	135.5	135.8	136.1	136.3	136.3	1.7	1.5	1.3	1.0
선진국	104.8	104.2	106.8	104.5	104.0	105.3	125.5	125.6	125.6	125.8	125.7	125.5	0.5	0.5	0.0	0.0
신흥경제국	40.3	43.7	46.5	48.1	50.1	52.6	62.2	65.0	67.5	69.2	70.4	71.1	12.3	30.5	8.9	14.3
유로지역	92.8	90.9	90.0	87.6	85.7	84.0	101.1	100.0	98.4	97.0	95.6	94.3	-8.8	-9.5	-6.9	-6.8
저소득개발국	31.5	35.3	37.9	42.4	42.9	43.3	48.8	49.7	49.1	48.4	47.7	46.8	11.8	37.6	-2.0	-4.1

자료: IMF Debt Database(2021)

팬데믹 전후 채무비율 중장기 추이 국제비교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한 일반정부채무(D2)의 중장기 추이 국제비교

- 2014-2019년 기간 우리나라 일반정부 채무비율의 증가율은 5.6%(증가폭 2.2%p)로 신흥경제국과 저소득개발국 대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2020-2025년 기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의 증가율은 34.2%(증가폭 16.6%p)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등과 비교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 G20 국가의 경우, 일반정부 채무비율 자체가 높고, 코로나19 대응으로 부채가 크게 급등하였으나, 2021년의 경제회복기 이후에는 채무비율 변화가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성공적이었던 방역 덕분에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작았던 우리나라만 유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세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은 재정건전성 관리의 큰 허점



자료: IMF Debt Database(2021)

IV. 재정위험 관리와 재정건전화 정책

사회경제 환경변화: 고령화·저성장·불평등

환경변화 :

세입증가세 감소에도 정부지출 확대 필요성과 요구 점차 커지고 있음

→ **재정의 삼중고(三重苦)***

- Aging: 대부분 선진국들이 피하기 어려운 경로, 향후 재정여건의 결정적 요인
- Low-Growth Trap: 경제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의 운
- Inequalit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과 격차 확대에 대한 반성, 실제 불평등의 정도만이 아니라, 체감도와 인식도 중요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65세 이상 비중)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2010년	11	23	13.1	15.95	20.6	16.9	18.3
2020년	15.7	29.1	16.8	19	22.4	20.6	20.3
2030년	24.3	31.6	20.3	21.9	27.2	23.6	22.1
2040년	32.3	36.1	21	23.7	30.5	25.8	23.8
2050년	37.4	38.8	21	24.1	31.6	26.2	24.1

자료: OECD.

Post-Covid19 장기 재정전망: 예산정책처(2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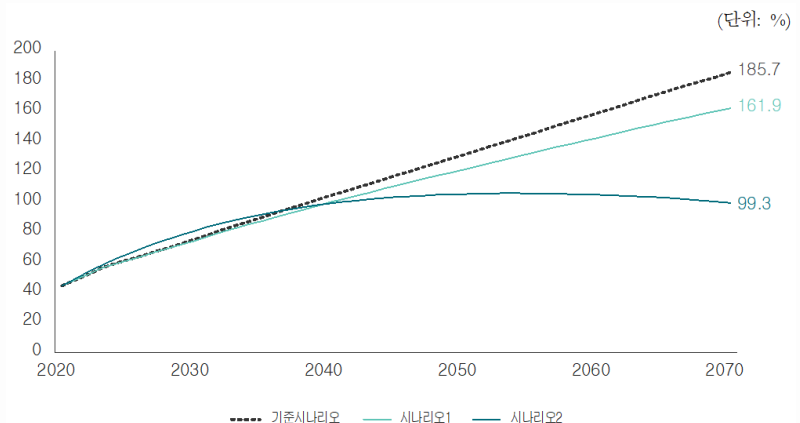
- 현행제도 유지된다는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
- 2020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매 10년마다 거의 30%p 상승
(재량지출: 경상성장률 2.2% 증가 가정)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통제 제안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단위: %)



재정위험 증가 : 국가신용등급과 Risk Premium

- 내년 부채비율 50% 넘어서 이후, 국가신용 등급이나 전망 하향조정 압력 작용
 - Fitch: AA- stable → AA- negative or A+ positive ?
 - * '20년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사례는 107개국, 총 211건*('20.10.6일 기준) 역대 최대
 - Fitch: 영국(AA→AA-(부정적), 3.27일), 캐나다(AAA→AA+(안정적), 6.24일) 등급 하향조정
 - 미국(AAA, 안정적→부정적, 7.31일), 일본(A, 안정적→부정적, 7.28일) 전망 하향조정
 - 부채비율 60%부터는 한국이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하다는 기존의 인식에 영향
 - EU 재정준칙: 부채비율 60% 상한(다만, 위기중 일시 유예)
 - 부채비율 60%는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critical point!
 - 리스크 프리미엄 = 특정 국채이자율 - 무위험 이자율(미국 또는 독일의 이자율)
 - 이자율의 부채 탄력성으로 IMF(2017)는 단순히 0.04, EC(2018)는 0.03을 가정
- 부채비율이 GDP의 60%를 1%p 초과할 때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3~4bp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

Debt Dynamics

- 부채동학과 장기수렴조건에 의하면, 3.5% 경상성장률 하에서,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지적자(GDP 대비 4.5%)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어서고, 장기적으로 133% 수준으로까지 증가하여,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부채 장기 수렴 조건〉

$$\begin{aligned}
 \lim_{T \rightarrow \infty} D_T &= \lim_{T \rightarrow \infty} \frac{D_0}{(1+g)^T} - \frac{B}{(1+g)^{T-1}g} + \frac{B}{g}(1+g) \\
 &= 0 - 0 + \frac{B}{g}(1+g) \\
 &= \frac{B}{g}(1+g)
 \end{aligned}$$

Dt: T기의 국가채무비율, g: 향후 명목 GDP 성장률

B: 향후 재정수지적자 비율, D₀: 현재의 국가채무비율, Y₀: 현재의 명목 GDP

재정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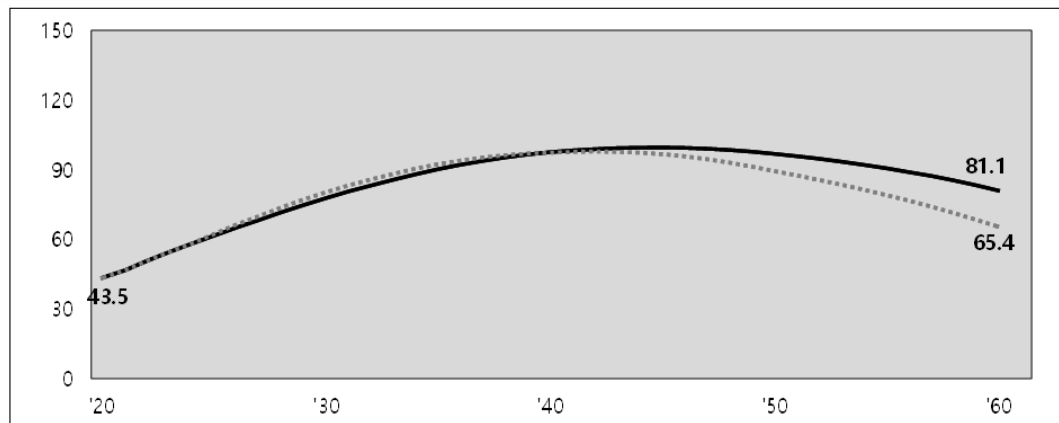
- 70년대 만성적 재정적자는 고도성장으로 커버; 80년대 재정안정화가 비축한 재정여력으로 외환위기 극복
- 2000년 이후 양입제출 원칙 → 채무비율 목표제 → 대규모 적자 누적 → **New Fiscal Rule**에 의한 재정통제 필요!!

Before Corona			Post-Corona
정부주도 고도성장기 (1980년 이전)	시장경제전환기 (1980~ 1999년)	경제 자유화와 개방화 (2000~2019년)	Welfare State (2020년 이후)
•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물가불안정·외채누적 요인 • 높은 경제성장률로 재정 건전성 문제 일부 극복 -정권 말 증세 시도: 1972년 체제의 낮은 세 부담 → 부가가치세 증세 전환 시도 → 유신체제 전복	• 재정수지 흑자 노력 재정안정화로 부채 축소 • 양입제출 원칙 확립 -건전재정에 기반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외환 위기 조기 극복에 성공	• 공적자금 국채전환·지출확대로 수지불균형 적자규모: GDP 3% 미만(2% 내외) • 국가채무 목표 설정 (암묵적 지출통제: 경상성장률 이내) - 정부 초엔 세출조정 시도, 정부 말로 수지균형 이연 *글로벌 경제위기·복지지출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 (박)'증세 없는 복지' 기조 견지 → 담배세 증세 후 정권 탄핵 (문)'서민증세 없는 복지' 기조 유지 위해 국가채무 목표 설정 포기	• 코로나 위기로 재정팽창·적자확대·만성적 수지불균형 적자규모: GDP 4% 후반 • 재정건전화 + 재정준칙 증세 vs 세출구조조정 • 국가채무 방치: → 국가채무 비율 급등 (매 10년 동안 30%p ↑) → 재정건전성 기반 급속 붕괴 → 재정관리 실패는 항상 정권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을 역사에서 배워야 함

Post-Corona 재정관리 계획: 기재부(2020.9)

- 무대응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2020년 43.9%에서 2045년 99%, 2060년 81.1% 수준으로 전망??
- 2020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매 10년마다 22%p 상승
(총지출: 경상성장률로 증가 가정 → 관리재정적자를 3% 초반에서 통제가정!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 비
율 추이
(단위: %)



새로운 재정관리 제도: 재정준칙 도입

기재부의 포스트 코로나 재정관리 방안

- '25년 재정준칙 도입: 채무비율 60% + 통합재정수지 3%
- 기재부의 관리목표 자율조정 권한(현재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시행령 격상)
- 의회 복지지출 법안 발의 시 Pay-Go 원칙 적용
- 시행령의 지위로 의회의 정치적 개입 견제 사실상 불가능
 - 법적 지위 격상 필요, 가능하다면 준헌법적 지위 부여
 - 의회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준칙 운영 방지 위해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 필요
 - 중립적 재정기구가 **재정준칙**과 **Pay-Go 원칙 적용** 동시 관장
- 관리재정수지 4.5% ≒ 통합재정수지 3% 초반:
 - 균형경상성장률 3.5% 가정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장기적으로 130%로 수렴
 - 관리재정수지 3%에서도 채무비율은 약 90%로 수렴
 - 현실적인 목표는 "관리재정적자 비율 평균 2.0~2.5%(상한 3%)" 적절

재정건전화 정책: 세입확충 및 지출삭감

필요한 재정안정화 규모

-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GDP 대비) 4.5%를 2.0~2.5%로 축소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필요
- 40~50조원 규모의 세입확충 및 지출삭감이 필요
-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채무비율을 장기적으로 60~70% 범위에서 통제 가능

"세입확충(20조원) : 지출삭감(20~30조원) plan 하에서,
매년 적자재정 보전 위한 채무 증가는 30~40조원 이내로 통제"

→ 2022년 전체 조세지출 60조원의 1/3이나 종합소득세(20.7조원) 규모의 증세 필요

조세지출: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 '22년 국세감면액: '21년 대비 약 3.6조원 증가한 59.5조원 전망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

구 분	2020년(실적)	2021년(전망)	2022년(전망)
○ 국세감면액 (A)	529,357억원	559,366억원	595,208억원
○ 국세수입총액 ¹⁾ (B)	3,036,717억원	3,327,157억원	3,588,658억원
○ 국세감면율 [A/(A+B)]	14.8%	14.3%	14.2%
○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²⁾	13.6%	14.3%	14.8%

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2022년 기준

< 주요 조세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2020년 (실적)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1	근로장려금 지급	44,826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7,747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51,317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3,630	근로장려금 지급	46,216	근로장려금 지급	48,718
3	연금보험료공제	33,067	연금보험료공제	34,989	연금보험료공제	37,547
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27,98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1,91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5,107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7,34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7,30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2,017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4,698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26,747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28,621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3,47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4,848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6,588
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55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9,52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956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7,88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9,51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20,436
10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17,76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08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9,705

2020년 (실적)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1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6,3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6,570	통합투자세액공제	18,152
12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332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15,73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7,425
1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812	통합투자세액공제	13,354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16,834
1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190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12,475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4,883
15	연금계좌세액공제	12,117	연금계좌세액공제	11,860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13,102
16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12,09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1,316	연금계좌세액공제	12,725
1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788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1,13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2,109
1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9,891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962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1,975
19	자녀세액공제	8,879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9,397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0,106
20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8,387	자녀세액공제	8,719	자녀세액공제	9,347
	합계	398,032	합계	418,415	합계	457,669
	(전체조세지출 대비, %)	75.2	(전체조세지출 대비, %)	74.8	(전체조세지출 대비, %)	76.9

조세 · 국민부담률 국제비교(2019년 기준)

집단 구분 (국민부담률)	한국 (26.9%)	집단 I (27% 미만)	집단 II (27 ~ 35%)	집단 III (35 ~ 43%)	집단 IV (43% 이상)	전체
국민부담	26.9	23	32.2	38.9	44.8	34.2
조세부담	20.0	18.0	23.5	27.0	34.4	25.1
1인당 GDP	31,605	32,549	32,972	48,083	47,693	39,143
해당국가		멕시코(16%) 칠레 아일랜드 터키 미국(26.8%) 한국	스위스 호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캐나다 슬로바키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45%)	OECD 회원국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조세수입구조 국가비교

집단 구분 (국민부담률)	한국 (26.9%)	집단 I (27% 미만)	집단 II (27 ~ 34%)	집단 III (35 ~ 42%)	집단 IV (43% 이상)	전체
소득세	4.8(58%)	5.2	7.2	8.9	14.2	8.3
법인세	3.8(127%)	3	3.1	2.9	3.1	3.0
사회보장	6.9(76%)	4.6	8.7	11.9	10.4	9.1
재산과세	3.1(163%)	1.9	1.9	1.8	2.4	1.9
일반소비세	4.3(61%)	4.6	7	7.9	8.4	7.0
개별소비과세	2.7(84%)	2.7	3	3.6	3.6	3.2
국민부담	26.9(79%)	23	32.2	38.9	44.8	34.2
조세부담	20.0(80%)	18	23.5	27	34.4	25.1
1인당 GDP	31,605(81%)	32,549	32,972	48,083	47,693	39,143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세입구조 평가

Tax Mix: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법인과세와 재산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 매우 낮은 상태

Tax Burden: 실효세율에서도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인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평균수준

세입확충 대상 평가 기준

- 효율성: 경제적 왜곡의 정도, 조세효율비용, 성장친화성
- 형평성: 소득재분배 효과
- 외부효과 조정: 사회적 및 개인적 순편익 격차 조정, 피구세(환경세)
- 신장성(세원의 규모)·보편성(과세대상의 범위)

토 론 문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석사

美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조교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이태석

1 22년 예산 및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1) 2022년 정부예산안 재정총량 및 평가

<표 1> 2022 예산안 재정 총량

(단위: 조원, %)

	19년 본예산	20년 본예산	21년 본예산	22년 예산안
총수입 (증가율)	476.1 (6.5)	481.8 (1.2)	482.6 (0.2)	548.8 (13.7)
국세수입	294.8 (10.0)	292.0 (△0.9)	282.7 (△3.2)	338.6 (19.8)
세외수입	26.6 (△0.4)	27.9 (4.9)	28.9 (3.6)	26.7 (△7.6)
기금수입	154.7 (1.5)	161.9 (4.7)	171.0 (5.6)	183.5 (7.3)
총지출 (증가율)	469.6 (9.5)	512.3 (9.1)	558.0 (8.9)	604.4 (8.3)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6.5 (0.3)	△30.5 (△1.5)	△75.4 (△3.7)	△55.6 (△2.6)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7.6 (△1.9)	△71.5 (△3.5)	△112.5 (△5.6)	△94.7 (△4.4)
국가채무 (GDP대비,%)	740.8 (37.1)	805.2 (39.8)	956.0 (47.3)	1,068.3 (50.2)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각 년도 예산안

□ 코로나19 회복과정의 세수증가와 중앙정부 지출증가율 소폭 둔화가 특징적

- 환경, R&D, 보건복지고용 분야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여 K-뉴딜관련 지출 증가폭이 큼.
- 국세수입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폭 증가는 지방재정 확대를 가져와 이에 관한 추가적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중요

2)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및 평가

<표 4>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총량

(단위: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482.6 (0.2)	548.8 (13.7)	570.2 (3.9)	593.9 (4.2)	618.5 (4.1)	(6.4)
국세수입	282.7 (△3.2)	338.6 (19.8)	352.9 (4.2)	367.7 (4.2)	381.1 (4.2)	(7.9)
세외수입	28.9 (3.6)	26.7 (△7.6)	27.4 (2.7)	28.4 (3.8)	30.0 (5.4)	(0.9)
기금수입	171.0 (5.6)	183.5 (7.3)	189.9 (3.5)	197.7 (4.1)	205.4 (3.9)	(4.7)
총지출	558.0 (8.9)	604.4 (8.3)	634.7 (5.0)	663.2 (4.5)	691.1 (4.2)	(5.5)
의무지출	266.1 (4.1)	301.1 (13.2)	311.7 (3.5)	327.0 (4.9)	342.0 (4.6)	(6.5)
재량지출	291.9 (13.8)	303.3 (3.9)	323.0 (6.5)	336.2 (4.1)	348.4 (3.6)	(4.5)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75.4 (△3.7)	△55.6 (△2.6)	△64.5 (△2.9)	△69.4 (△3.0)	△72.6 (△3.0)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112.5 (△5.6)	△94.7 (△4.4)	△104.7 (△4.7)	△108.4 (△4.7)	△109.2 (△4.6)	-
국가채무 (GDP대비, %)	956.0 (47.3)	1,068.3 (50.2)	1,175.4 (53.1)	1,291.5 (56.1)	1,408.5 (58.8)	-

주: 1)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2) 21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20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 세수증가와 재량지출 통제로 수지가 다소 개선되나 국가채무누증이 지속

- '23년 이후 지출증가율이 예년수준으로 조정되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지출규모가 증가
- 국세수입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폭 증가는 지방재정 확대를 가져와 이에 관한 효율성, 책임성 확보 필요
- 좀 더 강화된 세수 확보 노력과 함께 기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의무지출을 포함한 지출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채무증가 속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지출구조조정 원칙과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

1)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사업

□ 백신, 방역 등 감염병 대응 지출과 소상공인 맞춤형 재도약 지원을 대폭 확대

○ 백신, 방역 등 감염병 대응지출 확대

- '21년 예산에 편성된 0.8조원을 22년 예산안에서는 5.8조원으로 대폭 확대
- 총 8천만회분 백신 신규 구매, 국산백신 선구매, 예방접종비 등(3.5조원)
- 병상확보 등 방역 전체 단계 지원 공공인프라 확충(1.8조원)

○ 소상공인 맞춤형 재도약 지원 지출 확대

- '21년 예산에 편성된 1.1조원을 '22년 예산안에서는 3.9조원으로 확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1.8조원)
- 저신용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 등(1.4조원)
-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설비 도입대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0.6조원)

○ 코로나19 충격 이전에도 확대되어온 소득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 지역균형 발전 등의 예산들도 직간접적으로 위기극복과 관련됨.

□ (평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구매 비용의 긴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출대안 검토도 요구됨.

○ 백신접종을 전제로 한 치료가능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유도방안, 소상공인 폐업 및 재취업 지원 등의 대안적 위기 대응방안의 효과성 검토도 필요

2)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투자 관련(한국판 뉴딜 2.0,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표 5> 한국판 뉴딜 2.0 투입예산

(단위: 조원)

구 분	'20~'21년	'22년 예산안	'20년 추경 ~ '25년 계획
디지털뉴딜	10.8	9.3	49.0
그린뉴딜	10.3	13.3	61.0
휴먼뉴딜	11.4	11.1	50.0
합 계	32.5	33.7	160.0

자료: 2022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 ☐ (디지털뉴딜)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초연결 신사업 육성'신설(9.3조원)
 -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촉진 및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 (6.2조원)
 -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 (1.8조원)
 -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ICT 융합 및 생태계 활성화(0.8조원)
 - 교육·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0.5조원)
- ☐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확대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 (13.3조원)
 -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6.8조원)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3.5조원)
 - 녹색금융 도입 및 관련 유망기업 자금융자 및 생산기반 지원(1.9조원)
 -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정책기반 마련(1.1조원) 등
- ☐ (휴먼뉴딜)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및'격차해소'신설 (11.1조원)
 -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추진 등 노동전환지원(5.6조원)
 -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경감지원(2.2조원)
 - 기초학력 향상 및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 격차 해소 (1.3조원) 등
- ☐ (평가) 코로나 회복기에 미래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 투자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원방식과 전달방식의 모색이 필요

3) 지출구조 재구조화·협업예산 고도화·국민공감 예산 관련 사업

☐ 코로나 위기 회복기의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모색

-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의 재검토
 - 코로나 긴급금융지원(△1.5조원), 한시 일자리 및 생계유지(△1.1조원) 등
- 공무원 경상경비(특활비, 업무추진비 등) 128억원 절감
- 3년 이상 민간보조사업 재평가를 통한 감축 및 폐지(△0.3조원)

☐ 다부처 협업과제를 확대하여 협업예산 고도화 추진

- 다부처 협업과제를 2021년 12개에서 17개로 확대
 - 백신허브, 노동·자영업 구조전환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13.9조원 증액

☐ 국민공감예산 확대

- 학대피해아동 쉼터, 청소년한부모 자립패키지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등
- 농수산물 현장검사 등 국민제안 생활밀착형 참여예산 확대(0.14조원)

☐ (평가) 코로나 위기 회복기에 급속히 확대된 정부소비와 민간이전지출 증가율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위기시의 급격한 민간소비 감소 및 공급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소비와 민간이전지출이 대폭 증가함.
- 민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업생산 및 국제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정부소비와 민간이전지출의 확대가 소득 및 소비 충격 완화에 효과적
- 민간 생산과 소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정부소비 및 민간이전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물가상승과 이자율 상승을 가져올 우려가 높음.
- 정부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지출 비중을 확대하여 잠재성장률 제고와 불균등한 위기회복으로 인한 격차확대에 대응에 집중할 필요

4) 재정적자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 수입기반 확충 노력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악의적 체납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능력 제고
- 예비타당성 평가 등 성과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정비

☐ 세외수입 확대 노력

- 관리비용 절감 및 실익이 낮은 보유 부적합 국유재산의 매각 확대
 - 행정목적에 활용이 어려운 100m² 이하의 토지, 사유건물 점유지 등
- 국유재산특례 일몰제 도입, 존치 평가를 통한 정비 등 관리 강화
- 체납액 조기위탁 확대,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 등 연체채권관리 강화

☐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

- 저출산, 고령화, 지역인구소멸, 4차산업혁명 등의 다각적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
- 재정사업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보조금 평가 등을 통해 저성과 및 집행부진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
- 관행적 진행사업의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증액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

☐ 협업예산 활성화

- 협업예산제도 전면 확산 지원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부처간 시너지 창출 도모
- 전문적 분업형, 주기별 협력형, 수요자 맞춤형 등 협업과제 지속발굴
- 사업군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부처 합동예산 요구 및 집행, 평가체계 구축

□ 재원의 효율적 활용

-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회계, 기금간 재원조정을 통해 국가 재원을 합리적으로 활용
- 여러 회계, 기금에서 분산 운영 중인 사업의 재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 도모

□ 성과관리 내실화

- 22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거시적,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 추진
 - 프로그램 단위로 국민체감형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결과지표 위주 성과지표를 대폭 간소화
- 재정성과 DB 및 대국민 성과포털 구축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
-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성과목표관리 및 평가전반에 대한 계획 마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추진 중)

□ 중장기 재정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재정법 개정안)
-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대한 관리기준 도입
 - 재정준칙 관리 정부안: $(\text{국가채무비율}/60\%) \times (\text{통합재정수지}/\Delta 3\%) \leq 1.0$
- 대규모 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등 예외상황에는 준칙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발빠른 대응을 제고

□ 재정관리 인프라 강화

-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국가채무통계 보완 추진
- 국가채무와 국가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채무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보완지표 도입 검토

- 예산회계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통해 업무 간소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성 향상을 도모

□ 국가결산체계 개편

-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결산보고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로 간소화
- 회계감사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다양한 성과정보를 수록
- 국가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인식, 평가하도록 평가방식 등의 개선을 검토

□ (평가) 수입기반 및 세외수입 확충노력, 지출 구조조정, 협업예산 활성화, 성과관리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관리 인프라 강화 및 결산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노력, 재정준칙 도입 노력 등과 함께 추가적 수입확대 노력도 고려할 필요

-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과 수입기반 확충 노력만으로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지출 효율화를 전제로 하여 추가적 수입확대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정한 사회적 부담과 혜택의 공유를 바탕으로 적정한 국민부담의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병행될 필요
- 지속적인 중장기 재정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원칙과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이를 법제화하여 대내외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5) '23년도 이후 분야별 총지출 증가율 비교

<표 3> '21-'25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6-20 연평균 증가율	21-25 연평균 증가율	23-25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고용	199.7 (10.6)	216.7 (8.5)	232.2 (7.1)	246.1 (6.0)	259.3 (5.3)	(10.0)	(6.7)	(5.7)
교육	71.2 (△2.0)	83.2 (16.8)	84.8 (2.0)	87.4 (3.0)	90.0 (3.0)	(8.1)	(6.0)	(3.0)
문화□체육□관광	8.5 (5.8)	8.8 (3.9)	9.1 (3.5)	9.4 (3.5)	9.8 (3.4)	(5.2)	(3.6)	(3.5)
환경	10.6 (17.8)	11.9 (12.4)	12.9 (8.5)	13.7 (6.1)	14.5 (5.9)	(7.2)	(8.2)	(6.0)
R&D	27.4 (13.1)	29.8 (8.8)	32.3 (8.5)	34.0 (5.2)	35.4 (4.0)	(6.3)	(6.6)	(4.6)
산업□중기□에너지	28.6 (20.8)	30.4 (6.0)	32.6 (7.5)	35.0 (7.2)	36.4 (4.1)	(10.4)	(6.2)	(5.7)
SOC	26.5 (14.1)	27.5 (3.8)	28.7 (4.4)	29.5 (2.5)	30.2 (2.4)	(0.2)	(3.3)	(2.5)
농림□수산□식품	22.7 (5.3)	23.4 (3.4)	24.0 (2.3)	24.4 (2.0)	24.9 (1.8)	(2.6)	(2.4)	(1.9)
국방	52.8 (5.4)	55.2 (4.5)	57.7 (4.4)	60.3 (4.6)	63.1 (4.5)	(6.7)	(4.5)	(4.6)
외교□통일	5.7 (3.5)	6.0 (5.7)	6.2 (3.3)	6.4 (3.2)	6.6 (3.2)	(4.1)	(3.8)	(3.2)
공공질서□안전	22.3 (7.0)	22.4 (0.3)	23.4 (4.4)	24.3 (4.1)	25.1 (3.1)	(4.4)	(3.0)	(3.6)
일반□지방행정	84.7 (7.2)	96.8 (14.3)	100.4 (3.7)	103.0 (2.6)	105.8 (2.7)	(7.4)	(5.7)	(2.7)
총지출	558.0 (8.9)	604.4 (8.3)	634.7 (5.0)	663.2 (4.5)	691.1 (4.2)	(7.3)	(5.5)	(4.3)

주: 1) 16-20년 연평균은 16-20년 본예산 분야별 지출증가율

: 2) 21-25년 연평균 및 23-25년 연평균은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지출증가율

□ (평가) '23년 이후 전반적으로 지출증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K-뉴딜 관련 지출은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코로나 회복을 전제로 하여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
- 미래투자 관련 환경, 산업중기에너지, 보건복지고용 증가율 높음
- '22년 급증한 보건, 일반지방행정, 교육 분야 지출삭감 검토 필요

1)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 압력

- 코로나19 충격 회복속도가 불확실하고 불균등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코로나19 충격 회복국면에서도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우려
 - 코로나19충격 회복과정에서 산업별, 지역별, 계층별 회복속도가 상이하여 코로나19충격 회복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요구됨.
 - 코로나19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계절적 요인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존재하며, 추가적 충격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
 - 코로나19충격 회복이 원활할 경우, 세수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개선이 예상되나, 추가적 충격이 발생하거나 세수증가보다 빠른 재정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채무확대를 통한 재정대응이 불가피함.

2) 지속적 투자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채무위험관리 차별화 필요

- 유동성 조정국면의 이자비용 및 상환압력 증가를 감안한 선제적 채무위험관리를 통해 지속적 투자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국제적 유동성 증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기업, 개인의 채무가 급증
 - 2020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은 19%p, 개도국은 8%p, 저개발국은 4%p 증가(IMF, 2021.10)
 -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6.2%p 증가: 37.6% -> 43.8%
 - 코로나19충격 회복에 따른 국제적 유동성 조정과 비용 및 수요 상승압력으로 물가, 이자율, 이자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음.
 - 이자비용 증가는 채무상환 위험을 증가시켜 차환가능성을 낮추고 차환시 이자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관리 중요성이 높아짐.

3) 국가채무의 적정성은 채권자 판단의 몫으로 신뢰확보가 중요

□ 이론적 재정여력을 의미하는 국가채무 상한이 존재하나, 적정 국가채무 수준은 국가별 경제, 사회 특성과 정책대응에 따른 달라질 수 있음.

- 국가채무의 증가는 이자비용을 증가시켜 비생산적 재정지출을 늘리고, 국가채무의 차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재정위기를 가져옴.
-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절대적 국가채무 비율은 존재하지 않음.
- 장기 이자율에 비해 장기 성장률이 높을 경우, 단기적 국가채무가 급증하더라도 국가채무 관리가 가능
-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장기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자본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이자율 변동에 취약
-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으로 채권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정책 체계와 재정정책의 좋은 선택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 안정적 재원확보에 위해 중요

4)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지출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요구됨.

□ 이론적 재정여력을 의미하는 국가채무 상한이 존재하나, 적정 국가채무 수준은 국가별 경제, 사회 특성과 정책대응에 따른 달라질 수 있음.

- 국가채무는 미래 조세수입으로 상환되기에 이론적 상한 존재
- 국가채무 이론적 상한 및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 국가채무 수준은 국가별 특성과 국제 자본시장상황, 그리고 기술발전 경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정부 역할 수행을 위한 동태적 재원마련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가채무 이자비용과 위험관리비용을 감안한 현재와 미래의 조세부담의 평활화가 바람직
- 중장기적 재원마련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가 중요

5) 예산편성 원칙의 명확화와 이에 따른 책임성 확보가 바람직

□ 중장기적인 정부 역할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중장기적 차원의 양출제입 원칙을 표명하고, 필요 재원확보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

- 국가재정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에 따른 재정지출 계획 마련이 불가능함.
- 정부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장기 지출규모 총량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출규모 총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정 제도의 마련이 바람직
- 현재 중기재정계획과 하향식 예산편성은 이러한 총량 관리에 적합한 재정제도이나 장기 시계 재정준칙의 마련과 이에 입각한 기존 제도의 구속력, 책임성 강화를 통해 이자비용 절감을 도모할 필요
-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측면에서는 국가채무를 규율하는 재정준칙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 재정규모와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현실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채무수준의 사전적 마련이 어려움.
- 코로나19충격과 같은 단기적 경기충격에 의해 재정적자규모가 급증할 경우,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와 중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여 소규모의 재정흑자를 누적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 균형재정 상태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을 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러한 지출총량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국가채무 제반 비용과 현재 재정투자 수익률을 감안하여 현재와 미래의 조세부담증가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토 론 문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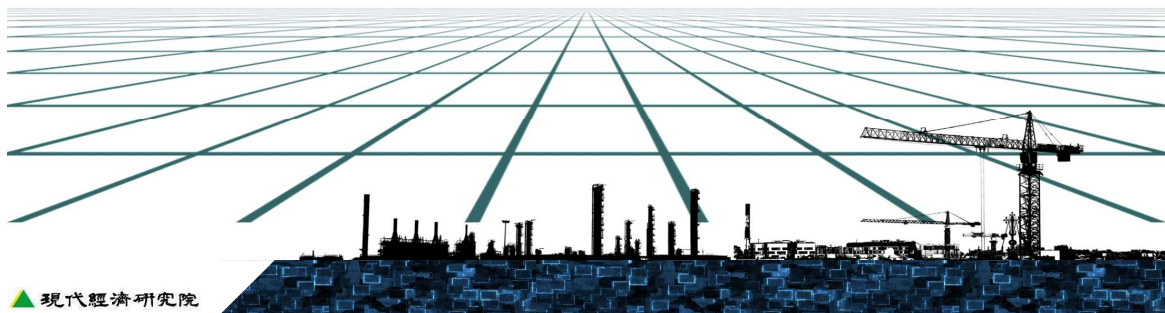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토론문)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2021. 10. 19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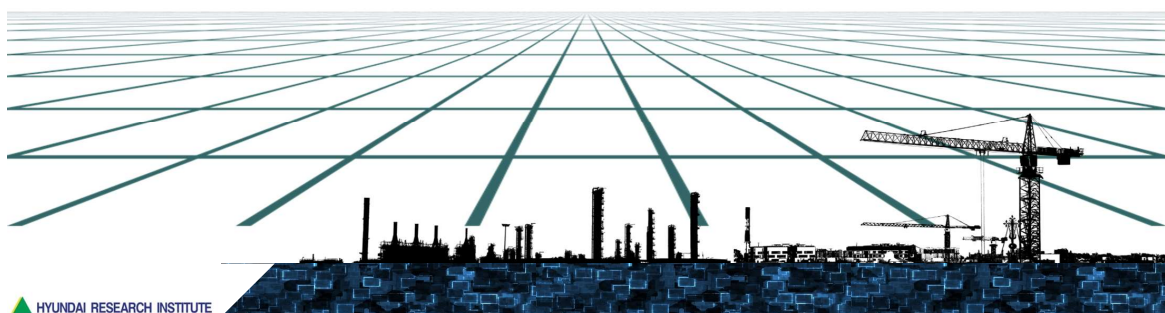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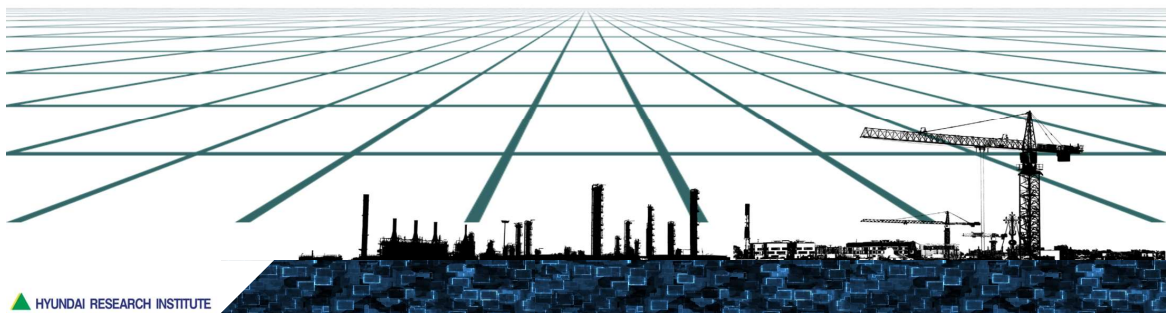
1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2 시사점



1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 ① 저성장 국면 진입
- ② 경제위기의 상시화
- ③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④ 복지포폴리즘
- ⑤ 큰 정부의 비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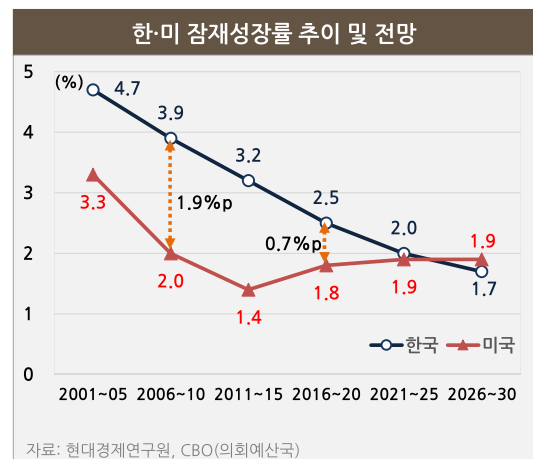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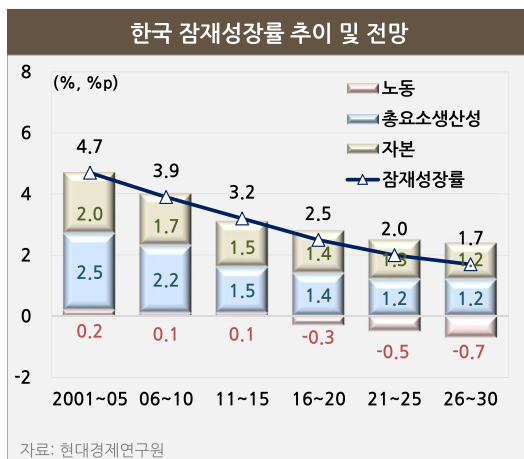
HYUNDAI RESEARCH INSTITUTE

① 저성장 국면 진입

1.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 잠재성장률 급락으로 절대적 세수 감소 우려

- 한국의 잠재성장률, 현재 2.0~2.5%에서 조만간 1%대로 추락 우려
-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 2006~10년 +1.9%p에서 **2026~30년 -0.2%p(역전)**



HYUNDAI RESEARCH INSTITUT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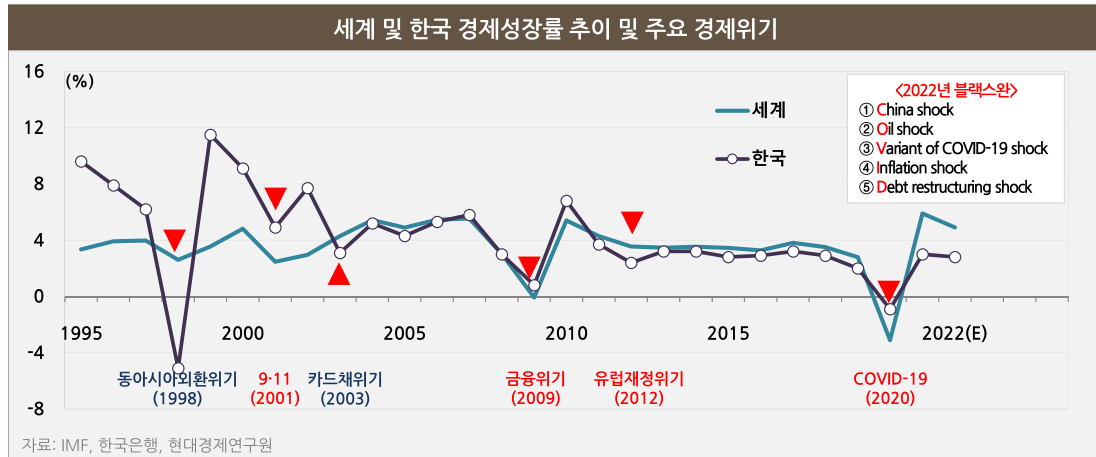
② 경제위기의 상시화

1.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 ■ ■ 잦은 경제위기로 경제 성장 경로 예측 불가능(복잡계 속 낙관적 전망 불가능)

- 평균 4년 내 한 번꼴로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 위기 이후 예상 중장기 성장 경로 수정 불가피
- 위기 원인도 다양*하여 위기 발생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움(신흥시장 디폴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팬데믹 등)

* 현대경제연구원(2021), "COVID 쇼크에 갇힌 한국 경제- 최근 대내외 리스크 동시다발화의 원인과 시사점", 현안과과제, 2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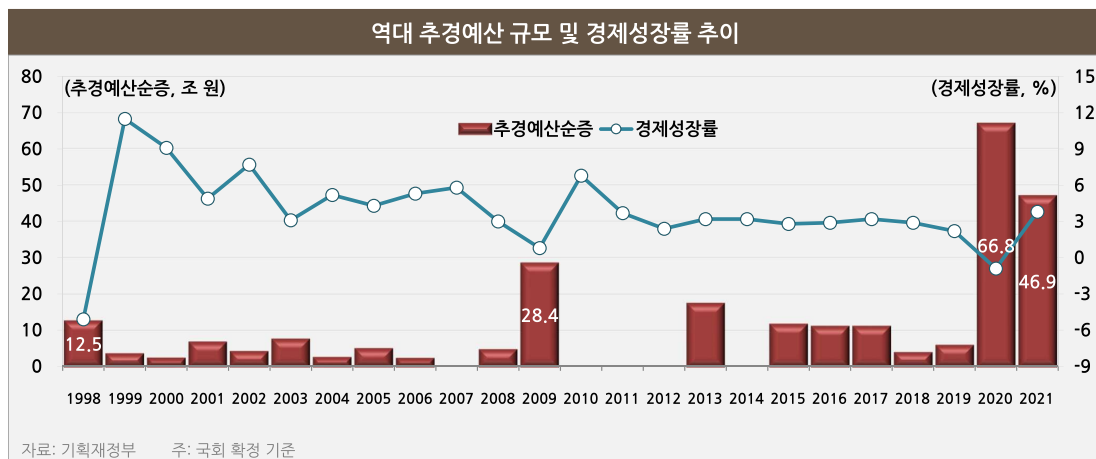


② 경제위기의 상시화

1.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 ■ ■ 추경은 경제위기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 정치 수단으로도 이용

- 경제위기 시마다 대규모의 추경편성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위기가 아닌 시기에도 타성적으로 편성
-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위기(2020년 네 차례, 2021년 두 차례)에 대규모 추경이 편성
- 그러나 최근 '15(메르스), '16(브렉시트), '17(일자리), '18(구조조정), '19(일본경제보복 등) 매해 편성



② 경제위기의 상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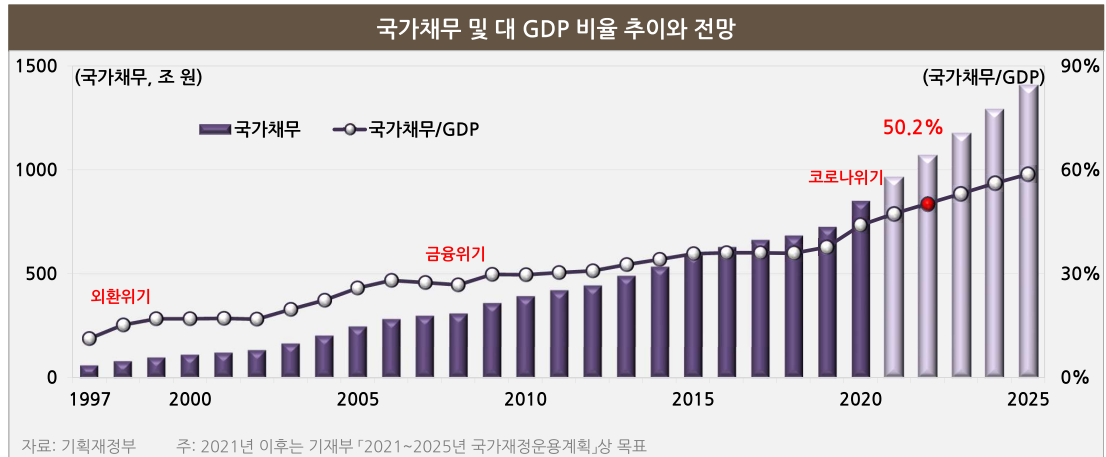
1.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연결

- 현 정부 재정정책은 복지·고용·환경·중기지원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 확대 기조가 특징
- 잦은 추경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도 건전성 훼손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코로나 위기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 이후에도 이력효과로 악영향 지속

※ 국가채무, 2022년 1,000조원, GDP대비 비율 50% 돌파

※ 국가채무/GDP 비율 연평균 증가폭, 0.9%p('10~'19) → 3.3%p('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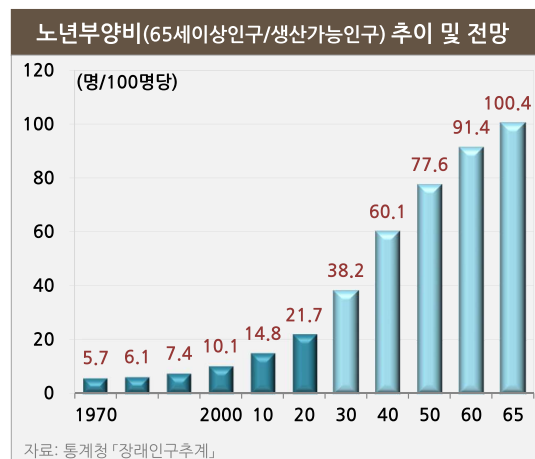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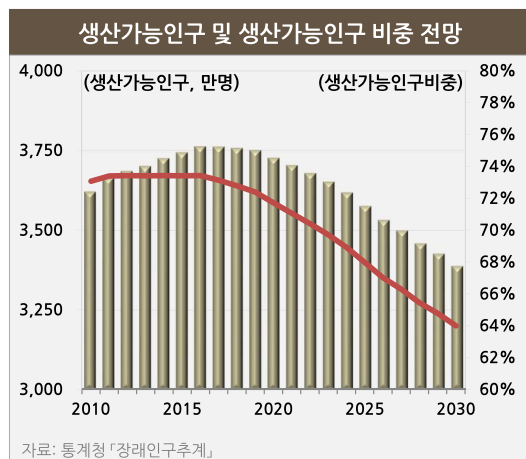
③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1.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재정에 직접적 충격

- 생산가능인구(15~64세),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 세수입에 부정적 영향
- 동시에 노년부양비* 도 급증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③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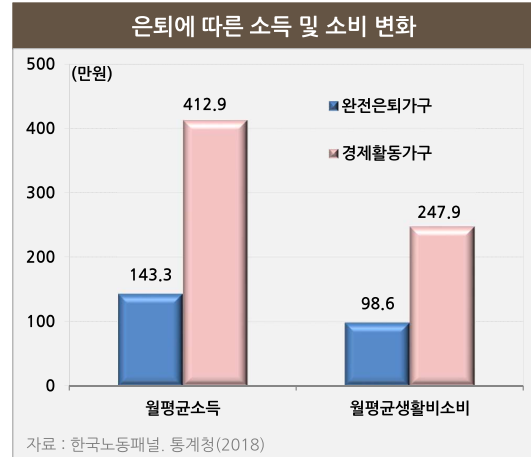
1.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 생산가능인구 감소(베이비 부머 퇴장)은 간접적 재정여건 악화 요인

-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부유한 경향이 있어 높은 소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으나,
-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절벽에 따른 경제 전체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결국은 장기적으로 내수(소비) 부진을 유발하면서 세수입에 간접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특성		
(단위: 만원)	베이비붐세대 (‘55~’63년생)	이전세대 (‘45~’54년생)
근로 소득	3,617.3	1,927.8
사업 소득	1,340.1	868.5
부동산 자산	30,516.4	27,242.3
금융 자산	4,532.2	4,154.5
총부채	5,591.9	3,809.4

자료: 재정패널, 산업연구원(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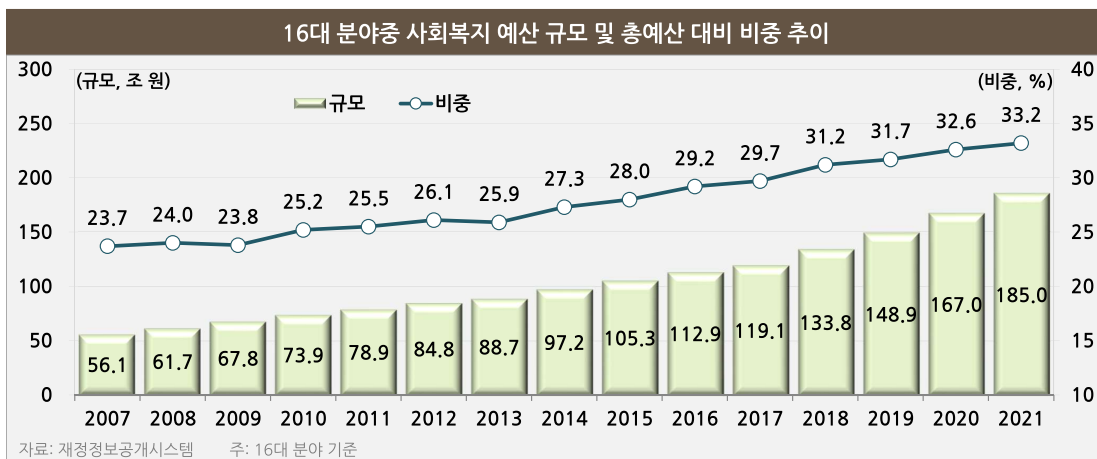


④ 복지포폴리즘

1.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 복지 지출에 대한 재정 비중 상승

-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7년 56.1조 원에서 2021년 185조 원으로 증가
- 2007~2021년 기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4%,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8.9%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사회복지지출/총지출 비중은 23.7%에서 33.2%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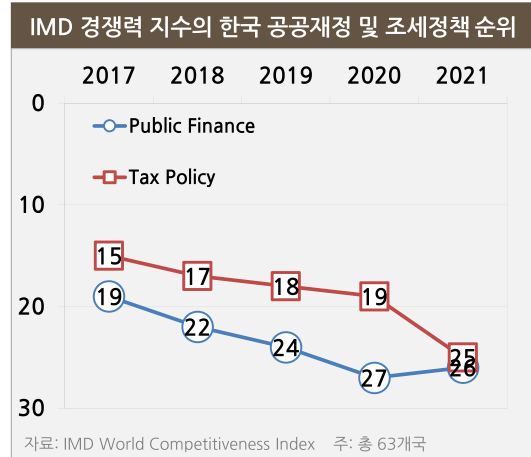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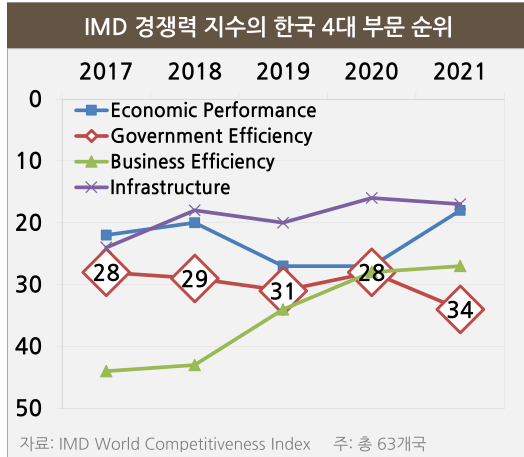


⑤ 큰 정부의 비효율성

1. 재정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효율성 논란

- 정부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큰 정부화'가 빠르게 진행
- 2021년 기준 총지출 약 600조 원(GDP대비 약 30%)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기대했던 경제 사회적 효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음



2 시사점



중장기 리스크 요인	대응 방안
①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인한 절대 세수 감소	-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ex: 소비세 인상) - 투자(기업투자 → 기업성장/고용증가 → 세수증가)를 유인할 수 있는 조세제도 구축
② 경제위기 상시화로 재정운용계획 무용	- 경제위기 상시화를 전제로 한 현실적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 경로 시나리오 고려 - 타성적 추경 편성 지양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분석·심사 능력 제고
③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재정적자 압력 급증	- 조세 부담인구의 감소와 정부 지원인구의 증가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응 - 이민정책, 여성경험참가 확대, 출산율 제고 등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비중 제고
④ 복지포퓰리즘에 따른 재정정책의 교란	- 기존 복지정책 구조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의미있는 신규 사업 발굴 - 생산적 복지정책 비중 확대로 경제 내 『복지→성장』 선순환 구조 도모
⑤ 큰 정부 비효율성에 따른 자원 낭비 우려	- 제로베이스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 요인 억제 노력 및 단순화된 조세제도 개편 요구 - 재정 공개의 범위 확대와 재정 사업별 사후 실제효과 분석 기능 강화 필요

토 론 문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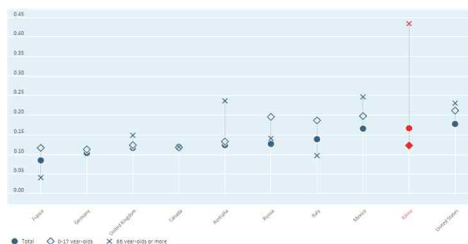
재정여건의 점검과 정책방향: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총지출은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매해 정부의 재정운용과 자원배분 계획이 반영되는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증가세는 2010~2022년 중 평균 8.5%로, 기간 중 총지출 6.2% 대비 2.3%p 높았다. 이는 동 시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2000년대 이후 지속되는 초저출산 상황, 빠르게 높아지는 노인인구 비중과 노인빈곤 문제, 경제성장세 저하와 4차 산업혁명 영향에 따른 소득불평등 및 고용불안정 등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한 정책 대응의 이루어진 결과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은 특별히 2014~2015년과 2018~2021년에 높아 각각 평균 9.0%와 11.4%로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총지출 중 비중이 2010년 27.7%에서 2020년 이후 3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노인인구 비중 및 합계출산율 추이(명,%)



빈곤율 국제 비교: 전체, 아동, 노인(%)



소득5분위배율 및 청년실업률 추이(%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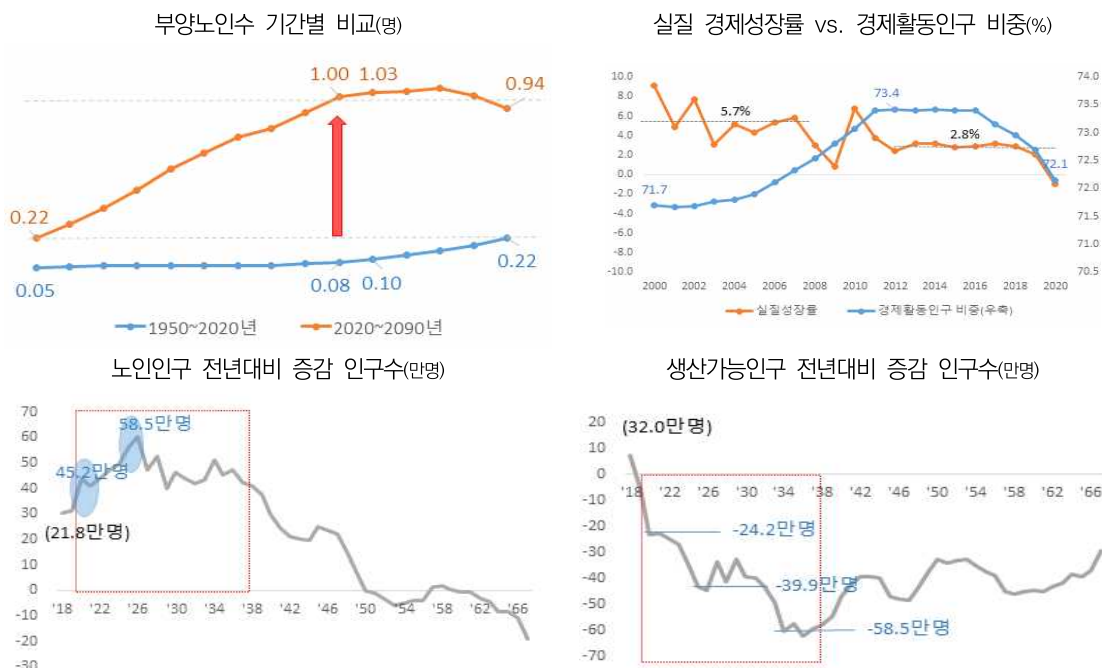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추이(10조원, %)



* 2010~2021년 재정지출은 본예산 기준이고, 2022년은 예산안 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런데 이러한 재정지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환경 요인들은 향후에도 커지며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는 방향에서 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이 2028년까지, 2035년 이후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이 진행되며, 우리 사회는 향후 5~6년 좀 더 길게는 20년 내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 고령경로에 놓여 있다. 이와 정반대로 미래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부양여력 지표가 되는 합계출산율은 2019년 '1' 이하로 떨어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올해는 전대미문의 0.78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저위추계 값으로, 당시 중위 추계값 1.09명 대비 0.31명이 적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는 2019년 예상했던 것보다 미래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이 클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양노인수는 보다 많아지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보다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통계청 중위기준 추계 기준으로 보아도, 노인인구는 2000~2019년 전년대비 연평균 21.8만명 증가에서 2020~2024년 45.2만명, 2025~2028년 54.3만명으로 2~2.5배 확대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00~2019년 32.0만명 증가에서, 2020~2023년 24.2만명 감소해 고 2024~2033년 39.9만명, 2034~2039년 58.5만명 감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여건의 구조적인 변화에 코로나와 기후변화 이슈 등으로 높아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향후 국가의 역할은 보다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인구동향조사'와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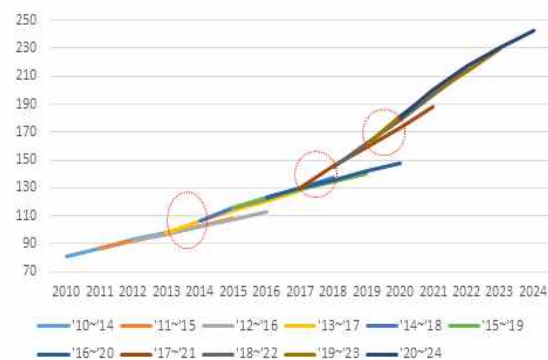
재정 여건

이러한 재정환경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확인된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되고 관리재정수지는 -1~-2%대 적자 수준으로 개선된 반면, 2021~2025년에는 경제가 회복되어도 통합수지가 -3%대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관리재정수지는 -4% 후반대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향후 정부의 수입 여건 대비 지출소요가 커지는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 재정여건은 올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힘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2020년까지 매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계획을 비교해 보면, 2013년, 2017년, 2019년과 같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큰 시기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이 전년도 대비 높아져 왔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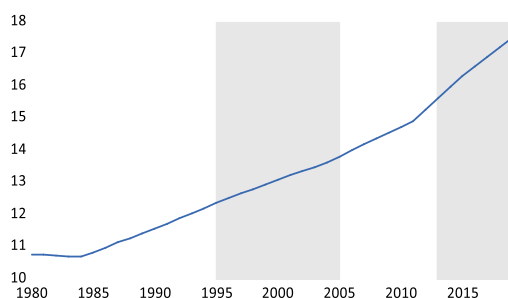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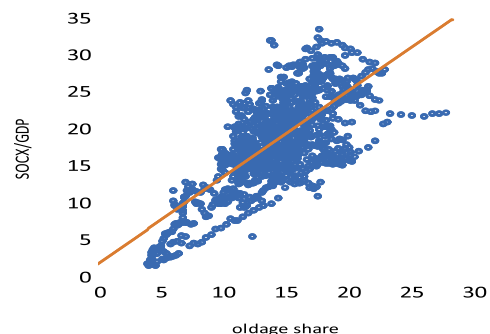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조원)



OECD 평균 노인인구 비중 추이: 1980~2019년(%)



사회보장재정지출 비중 vs. 노인인구 비중: 1980~2019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시스템, OECD, StatExtract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정부 재원은 부채(국가채무비율)와 조세(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0~2025년 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재원의 부채 부담이 조세 부담보다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어 2014년 이후에는 국가채무비율과 국민부담률간의 격차가 10%p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 위기 20%p에 근접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0년 17.1%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 35%를 상회하였고, 최근 코로나 위기로 2021년 47.3%(잠정)로, 기간 중 30.2%p 높아졌다. 국민부담률은 20.9%에서 시작해 2021년 27.9%(잠정)로, 기간 중 7.0%p 높아졌고,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2%로 2.8%p 높아졌다. 즉, 전반적으로 국가의 부채 수준과 국민의 부담 수준이 모두 높아졌는데, 그 동안은 주로 부채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왔다. 향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는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부채와 국민부담 간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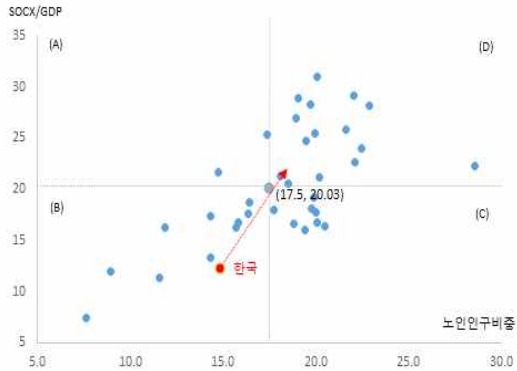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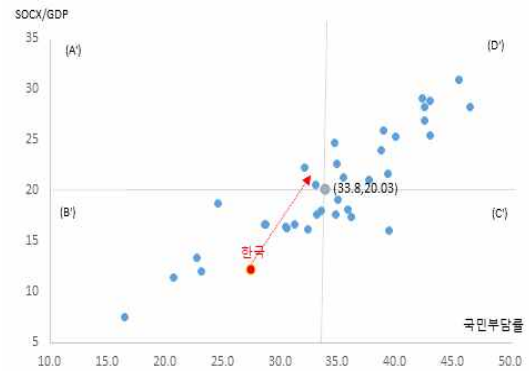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중(14.9%, 29위)이 높지 않은 가운데, 사회보장지출(SOCX) 비중(12.2%, 33위)과 국민부담률(27.3%, 31위)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부담·저복지 국가군에 속해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20%대 OECD 국가들¹⁾의 사회보장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이 평균 21.4%와 32.3%로 우리나라 대비 각각 9.2%p, 5.0%p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2025년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지출이 확대되며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 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상승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1) 고부담/고복지 유형의 프랑스, 스웨덴 등은 제외하였다.

OECD: 노인인구비중 vs. 사회보장재정지출비중(%)



OECD: 사회보장재정지출비중 vs.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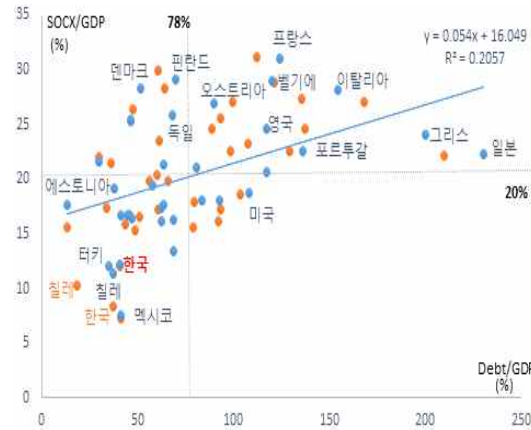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Extracts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06~2019년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과 국가부채 부담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것을 볼 수 있다. 기간 중 사회보장지출비중과 국가부채비율 평균이 각각 20%와 78%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OECD 국가군 중 사회보장지출 비중과 국가부채비율이 평균 대비 낮은 저부담·저복지 군에 속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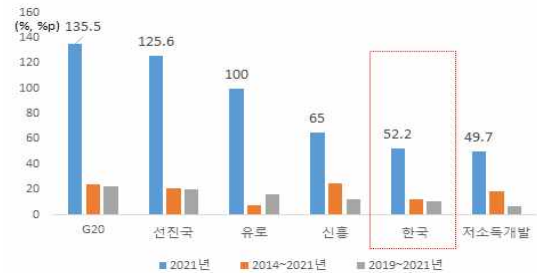
발제 자료를 재가공해 2014~2021년 중 국가부채비율 및 기간 중 변화폭을 비교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52.2%로 신흥국과 저소득개발국 사이에 위치하고, 2014년 이후 변화폭이나 2019년 이후 변화폭도 중간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국가들과의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국가부채 조달 여력이 앞으로의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찍이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경험한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노인인구비중이 고령사회의 14%에서 상승하며 국가부채비율이 평균 64%p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인구 비중이 20%인 시점과 비교한 독일의 국가부채비율은 총 56%p, 일본은 68.1%p 높아졌고, 17% 시점과 비교한 영국은 53.3%p, 프랑스는 78.1%p 높아졌다. 2021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16.5%이고 2025년경 초고령사회 기준이 되는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국들의 과거 경험은 향후 국가의 재정부담이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부담의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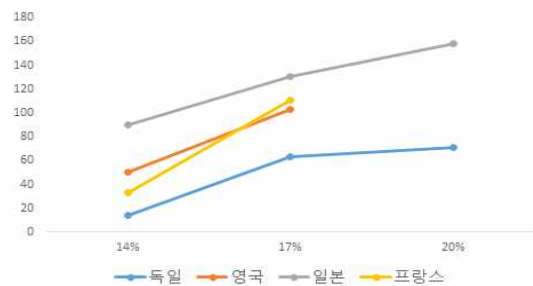
사회보장지출 비중 vs. 국가부채비율: 2006년, 2019년(%)



국가부채비율 및 변화폭: 2014~2021년(%, %p)



주요국의 노인인구 비중과 국가부채비율(%)



자료: OECD, StatExtracts, 김우철(2021.10),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을 이용하여 저자 재작성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환경이 구조적으로 크게 바뀌는 시점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기에 주어진 국가적 과제와 이를 감내하기 위한 재정의 과제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중장기 플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당연히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사회구성원 전체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일 것인데, 이를 차치하고라도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의 검토와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 재정준칙(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도입을 계획하고,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부처간 협업예산 활성화 등의 대안을 담았다. 그런데 지금의 부처 단위의 칸막이 예산구조 하에서 지출의 구조조정과 다부처간 예산의 공동운영 등 재정관리 방안은 그 실효성이 제약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불필요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그동

안 압축 복지의 경로에서 재정누수나 비효율적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을 찾고, 국가의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의 부채수준이 60%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부채 외에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 수준을 높이는 대안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나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부담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담의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는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원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우선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등 글로벌 조세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며 새로운 소득원이나 소비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현재의 조세구조와 과세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과세 대상을 발굴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에도 제도내 혹은 제도간 형평성과 연계 강화, 부담과 급여 체계의 합리화, 공공부조와의 역할 분담, 통합적인 운영·관리 등을 통해 적정한 부담과 불필요한 지출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향후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발표자는 재정 안정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있는 자료를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큰 틀에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한계를 생각할 때 재정준칙을 세워서 정부재정을 잘 관리하자는 발표자의 접근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복지정책, 사회보장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발표내용의 팩트나 가치를 논박하기 보다는 향후 복지지출 증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전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 등 재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복지정책 논의는, 실제로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현재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지출 수준이 낮아서 연 100조 원 정도는 더 복지에 쓸 여력이 있으니 어디에 쓸지 생각해보자’는 식의 이야기가 사회복지 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복지성숙국가들에 비해서 낮지만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현 제도가 유지된다고 해도) 그들 국가의 수준을 추월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여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입각하여 논의를 하도록 한다.

발표자도 언급했다시피,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나 확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전체 국가지출에서 큰 비중을 ‘고정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나 확대가 과연 없을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마구잡이로 늘려서도 안 되겠지만 (재정적 여력 때문에) 절대 복지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접근 또한 비현실적이다.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병수당과 같은 제도는 한국 사회보장에서 큰 빈틈이었던 점에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 지출이 최근 크게 늘어났다는 우려도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수급요건을 낮추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OECD 기준의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 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수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0%로 한참 낮은 상황이다. 그 외에도 개별 복지제도에서의 저복지 수준의 정상화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의 추정보다도 복지지출은

중장기적으로 더 높일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일부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축소를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2세인데 (2033년까지 65세), 고령화를 고려할 때 (다를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더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연금지출은 일정부분 예상보다 줄어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 추계에 대한 의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다.** 국민연금 기금 추계나 재정추계 등 모든 추계에서의 가정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너무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점이다. 우리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1971년생이 100만 명 이상 태어났었는데, 2020년에는 20만 명 대가 태어나는 상황에서 장기 인구 예측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계속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향후 우리나라에서 20여년 후의 노동공급문제는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제시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찌 되었든, 한국 현실에서 향후 은퇴 연령 인상이나 이민 등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한데 각종 추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 ‘대안이 없어서 사용하는 각종 가정들’을 사실로서 간주하는 각종 추계의 수치를 맹신해서는 정확한 진단도, 처방도 불가능하다. 추계는 추계일 뿐 법칙이 아닌데도 추계를 참고자료 이상 맹신하는 풍토가 지배적이다. 현실적이지 않은 apocalyptic 한 - 자극적인 - 가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전한 토론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향후 필요한 복지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는가?** 막연히 복지증세를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이며 우리의 지출 요소 등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 많은 연구들이 외국과의 세원구조 비교를 하지만 별로 의미 없어 보인다. 각 국은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조세 정책을 발전시켜 왔고 그 세원 역시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일견 우리나라가 법인세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중심인 나라에서 법인세 비중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높은 조세와 복지로 유명한 스웨덴이지만 역진적인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것도 세원의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자산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세원 확보보다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는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불평등 문제에서 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반도 되지 않으며 절반 이상이 조세체계, 임금체계 등을 통해서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복지지출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현재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사회보험의 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 (사회보장기여금)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장기적으로 세목별 추계를 한다면 사회보험료 비중은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급여가 기여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된다는 점에서 재원 확충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지 확대기에 복지를 위한 증세라는 것이, 일반 조세가 아니라 사회보험료를 인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보험료가 소득세에 비해서 현저히 역진적이며 근로소득 위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대개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CSG 라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이름의 사회보험료와 구분되는 복지목적세 (모든 소득에 부과)를 만들어서 건강보험이나 가족수당, 실업급여에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일반조세를 통해서 사회보험 재원의 20-30%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과연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조세 중에서도 어느 세목을 중심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지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정도 수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직장가입자 중 지금까지는 극소수만 소득월액보험료 (비근로소득에 부과) 대상이었으나 곧 그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데, 개인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같은 (급여가 기여에 거의 연계되지 않는) 제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재원을 활용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근로소득 중심의 사회보험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노동을 징벌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복지 증세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보험 중심의 구조에서 사회보험 내에 사 어떻게 조세와 보험료가 책임을 분담할 건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같이 자산가치 중심 사회 (빚을 내서라도 자산확보를 하는 것을 다수가 선호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 (즉, 소득세 증세)는 다수가 자신의 가처분 소득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의 이해 하에서 복지재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통일부 『통일박람회』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출물 모니터링사업
제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운영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제5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제5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6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제6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
제11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7년 연속)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1. 10. 19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자 :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토 론 자:

1.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2.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3.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4.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축 사: 이 효 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사)

2부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 2021. 9. 15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 : 김 원 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토 론 자:

1.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 김 광 병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4.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5. 이 상 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축 사: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 원: 행정안전부

1부 사회: 안 자 희 부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805>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128449> 한국NGO신문

<http://www.snibo.co.kr/44068>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71555584220949>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5001201> 뉴스핌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053> 충청일보

● 2021. 8. 24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주제발표자 :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전문기자)

토 론 자:

1.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국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4.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부 사회: 김 은 경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복지뉴스

<http://m.snibo.co.kr/a.html?uid=43991> 성남일보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 대한경제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뉴스핌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디지털타임스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LUAAXRBCA/> 조선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72> 환경일보

● 2021. 6. 16 (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2.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김 대 광 청년 (취업후 퇴사, 창업/ 챗터서울 대표)
4.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 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1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ngonews.kr/120618> 한국NGO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0939375520029> e대한경제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워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데일리안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2548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경인매일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이로온넷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 정 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 규 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 성 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 중 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제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제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 종 훈 기자 (중앙일보)

3.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 진 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 우 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 동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동 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 승 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 영 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 국 은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2.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 은 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 12. 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 윤 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 경 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 옥 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 열 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 찬 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 병 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 혜 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 진 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 기 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 연 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 신 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 혜 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재 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 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 성 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 태 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 우 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 인 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 경 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 득 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 명 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 준 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정 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 동 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 양 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 수 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 경 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 현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 영 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 수 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 근 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 은 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 성 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 명 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 근 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 점 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 종 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 성 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 오 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축 사 : 최 성 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 사 회 : 김 준 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 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 찬 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 삼 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 한 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 미 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 태 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 명 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 은 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 정 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론자:

1. 박 병 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 윤 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 준 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 윤 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 민 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 선 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레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홉플러스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인 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 광 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종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 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촬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 미 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 준 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 정 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학 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 혜 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 대 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 현 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 명 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 말 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캣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 영 선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

1. 박 용 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 백 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 상 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 윤 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 서 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 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 영 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 미 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 선 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 순 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 영 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전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 무 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 현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 승 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전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 종 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 향 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 애 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 윤 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 관 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 욱 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 병 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 창 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 순 태 소장 (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 무 성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중장년층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

- 일시: 2021년 10월 22일(금)~23일(토)
- 장소: 충북 보은, 괴산
- 대추따기

2. 힐링등산 & 토크콘서트 & 장기자랑

- 일시: 2021년 11월 4일(목)
- 장소: 양평용문산 야외공연장
- 참여대상자: 중장년층 100명

3. 토 론 회

-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제: 복지포폴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주제발표자: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 재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포스터 첨부

4. 토 론 회

-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제발표자: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 자원봉사

- 일시: 2021년 12월 24일(금) 오후 1시
- 장소: 성남 모란 '안나의 집'
- 참여대상자: 남녀노소 불문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 2)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 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노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소장 김 미 령)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3) 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1700조원 돌파한 국가부채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일시 2021.10.19(화)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촉사 이 효 수 前 영남대학교 총장

발표자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법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2021.11.10(수)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발표자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론자

조성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정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최연혁 교수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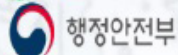
김상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12 주년 기념 토론회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